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5~2006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5~2006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안보정세	3
2. 북한 핵문제	15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19
가. 한·미 관계	19
나. 한·중 관계	27
다. 한·일 관계	31
라. 한·러 관계	33
II. 북한정세	39
1. 대내 정세	41
가. 정치동향	41
나. 경제동향	45
다. 사회동향	51
라. 군사동향	56
2. 주요 대외 관계	59
가. 북·미 관계	59
나. 북·중 관계	64
다. 북·일 관계	68
라. 북·러 관계	72
마. 북·EU 관계	75
3. 대남동향	81

Ⅲ. 남북한관계	85
1. 남북대화	87
가. 장관급 회담	87
나. 경제분야 회담	91
다. 군사회담	95
2. 남북교류협력	99
가. 경제분야	99
나. 사회분야	106
3. 인도주의 사안	109
가. 대북지원	109
나. 이산가족문제	113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117
라. 인권문제	121
 부록: 2005년 주요 사건일지	 125

I

동북아정세

1. 동북아안보정세

2005년 동북아 정세는 미·일 대 중·러의 느슨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중국의 지역 패권세력 부상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로 특징지어진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 미래전략을 염두에 둔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역내 국가들 사이에는 과거사 및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중국·일본은 외교적 마찰을 겪으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협력태세를 유지하여 6자회담에서 동북아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인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 목표 하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예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급격히 확대되었다. 미 국방예산은 2002회계연도 3,432억 달러에서 2005회계연도 4,207억 달러로 증액되었고, 2006회계연도에는 4,416억 달러가 의회에 요청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미 본토방위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2004년도 미국의 실제적인 국방비 지출은 4,605억 달러로써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7%를 차지하였다.

2004년 알래스카 기지에 초보적인 MD체제를 배치한 미국은 올해도 미사일 요격 실험을 계속하며 내년도 MD체제 예산으로 90억 달러를 책정하였다. 또한 고강도 지하 목표물 파괴용 핵무기인 ‘벙커 버스터’ 차세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 2,500만 달러를 의회로부터 새로 승인

(05.11)받았다. 한편, 미국과 일본정부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사일방어 체제의 차세대 미사일 개발 시, 일본이 총비용의 3분의 1 수준인 10억~12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2006년~2008년 지대공미사일, 레이저 항공요격기, 이지스 대공 요격함 및 전역 고고도 미사일방위망을 갖춘 MD체제를 작전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계기로 해외주둔 미군을 미래전쟁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재배치하고 있다. 미래전략 구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주둔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즈베키스탄과 민주화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카스피해 송유시설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여 아제르바이잔과 미군 주둔 합의를 체결(4.13)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공군기지를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전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21세기 아시아전략의 요체로 설정하고,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미·일동맹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군의 이라크전 지원을 명분으로 유사법제, 자위대법 개정안 등을 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 12월에 발표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 일본은 중국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내세워 자국의 안보역할 증대를 정당화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일동맹의 세계화 및 전략적 상호의존을 구체화시킨 공통의 전략

목표를 설정(2.19)하였다. 그 후 양국은 전략적 연대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 재편·재배치 계획을 발표(10.29)하였다. 이번 재편안의 핵심은 미 워싱턴 주에 있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개편하고, 이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자마(座間) 미군기지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향후 주일 미 육군 거점 사령부가 되며,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기동집단사령부’가 배치될 예정이다. 즉, 주일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연합군과 유사한 체제로 통합하고 미·일 공동사령부를 설립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후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11.16)에서 주일미군 재편의 가속화 및 양국의 동맹관계 강화를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미·일 전략적 연대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MD체제가 구축되면 미국의 핵·미사일 선제공격 능력이 강화되어 대미 전략적 억지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잠수함 증강 및 항공모함 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며,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27/30 등 최신에 전투기를 도입하였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사정권 내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0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05~2010년 사이에 30기~60여기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는 ICBM, SLBM, 전략 폭격기 등 3대 핵전력 체제를 갖추고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MD체제를 구축하여도 여전히 대미 핵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MD구상을 반대하면서도 중국과는 달리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미·일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안보현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방 합동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기로 합의(2.2)하였다. 또한 2005년 양국은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6.30~7.3)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중·러 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에 공동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 회원국 정상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7.5~6)하고, 안보·경협 문제 등을 논의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 지역의 정권교체에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SCO 정상들은 이란·인도·파키스탄·몽골 등 4개국에 옵저버 자격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자기 세력권에 포섭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미국은 국방대표단을 파견(4.22)하여 F-16·18 전투기 판매 등 군사지원 의향을 전달하고 핵·에너지 분야 협력도 제의하였다. 한편,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인도 방문(4.9~12)을 통해 43년간의 양숙관계를 청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국·러시아·인도 3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개최(6.2)하여 3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정치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미국은 인도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하여 양국간 민수용 핵에너지와 첨단기술 분야 등의 협력협정에 서명(7.18)했다.

미·일동맹 견제를 위해 중·러는 중국 산둥반도 및 인근해상에서 전투기·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8.18~25)하였다.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동북아지역에 미·일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UN의 원칙에 부합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합동작전이라고 밝히고 미국 등 제3국을 겨냥해서 실시한 훈련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양국은 일관되게 반테러전쟁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다짐하고 있으며, 각기 미국과 정치·경제적 협력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2005년 중국은 ‘군비통제·감군 및 비확산 노력’이라는 제목의 군축백서를 발표(9.1)하고, 연례 군사훈련(9.27)에 미국·러시아 등 외국 군사 참관단을 초청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에 대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설득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 및 군사적 압박에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현안 문제들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만의 분리·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분열방지법을 제정(3.14)하였다. 중·대만 관계에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차단시키기 위해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지도자들과 국공합작이후, 처음으로 정식 회담을 개최(5.29)하였다.

한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5.5)에서 중·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미·중관계를 중요시하며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견(7.11)에서도 현재, 중·미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지도자는 건설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실리위주의 외교정책은 권위주의적인 국내정치 문제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인해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2.22)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주주의 법치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러시아 특유의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반테러 공조, 우주 협력, 국가와 지역별 분쟁해결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국제정세 전반에 걸쳐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실익을 위해서 무기수출·핵연료 수출 등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원자력 협력협정

을 체결(2.26)하고, 미사일 무기 판매계약을 체결(12.2)하였다.

한편, 미국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민주화 혁명을 지원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2005년 초 그루지야·우크라이나 및 키르기스스탄(3.24) 등에서 연쇄적으로 민주화 혁명이 발생한 후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 중·러 정책은 안보 분야의 견제를 강화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의 대외정책도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의 확산’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1.20)하였다. 미국은 중·러에 대해서 민주화 개혁 및 인권 증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민주화·인권 압박을 강하게 가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11.20)에서 오히려 미·중 간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며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건설적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사실 내정 간섭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인권외교는 주로 중동지역 및 북한 등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핵문제 해결의 타협점을 도출하고 북한 핵 포기,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9.19)하였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특사에 임명(8.19)된 레프코위츠는 대북 식량지원과 인권 연계를 언급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핵문제를 넘어선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은 북한 인권 및 민주화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편승하여 정치·군사대국화를 지향

해가자 일제 침략을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하였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일본과 한국·중국 관계는 2005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1905)됐던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3.17)을 강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시마네현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2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강경한 어조의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3.17)하였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도 조어도 영유권,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일본의 우익계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지원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4.5)하자,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4.2~21)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을 주장하며 중국의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개최(4.23)하였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자 우이 중국 부총리는 일본 방문(5.17~24)중 총리와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귀국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6.20)하였으나 역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만 재확인하였다. 그 후 중국·한국은 일본과의 외무장관 회담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우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변국과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반대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확대 결의안 단일화 협상

(8.4)이 결렬됨으로써 사실상 무산되었다.

주변국들과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우정민영화 법안 문제로 인해 중의원이 해산되고 이에 따른 조기 총선이 실시(9.11)되었다. 선거 결과는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압승한 후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5번째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10.17)하였다. 한편, 일본 자민당은 ‘군사력 비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 제2항을 삭제하여 자위군을 합법화하고 해외 군대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승인(10.28)하였다.

고이즈미 내각이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확고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11.18)이 개최되었으나 양국 현안들에 대한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담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중국은 제9차 ASEAN+3(한·중·일)정상회의(12.12)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12.4)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북방영토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은 쿠니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북방4도의 완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북방 4도 중 2도 반환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방안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주변국들의 갈등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침묵할 경

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 관계가 악화되면 미군의 역내 안정자 역할이 도전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과 역내 국가들과의 갈등이 단순히 과거사 해석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안보전략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동북아 정세는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이에 비례하여 중·러의 전략적 연대도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강경 보수주의자들을 충원한 고이즈미 내각은 헌법개정을 추진하며 자위대의 정규군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일본의 보수·우경화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 과거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일본의 대북정책도 보다 강경한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동북아 정세와는 별개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MD체제 구축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과 허리케인의 피해로 인해 확대된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방비 증액, 대외 군사적 개입 등 공세적인 안보전략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라크 안정화 지연, 사회보장정책 개혁 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민의 불만은 미국 정부가 대외정책을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기초를 유지할 것이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방안'(PSD)훈련을 지속하며 국제 인권단체들을 통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는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 및 지역단위

로 실시되는 의회선거의 특성상 민주당이 압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대북정책의 온건·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헌법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각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퇴임(06.9)하고 보수성향의 총리가 취임할 경우, 일본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군사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즉, 정규군 체제를 갖춘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재시도할 것이다. 이런 경우 신사참배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역대 같듯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일본측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자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6자회담과 병행하여 북·일 외무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일 수교회담도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할 경우, 일본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급격히 선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함께 일본도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대북 인권개선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군사동맹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새 총리 취임을 전후하여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단하도록 대일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경제협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압력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은 내년 말경

에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6년에도 미국과 북한에 대해 서로 양보하여 6자회담 공동성명 구체화 작업에 합의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대북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곡물 및 원유 수출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김국신 · 동북아연구실장

2. 북한 핵문제

2005년 초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과 핵무기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2.10)했다. 외무성 성명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밝힌 공식 선언임과 동시에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기존의 핵정책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국내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 핵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이라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북한은 4월, 2년 여간 가동했던 5MWe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했다. 이를 재처리하게 되면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12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얻게 된다. 북한은 7월 5MWe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를 장전하고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보유 성명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6자회담이 1년 이상 열리지 못하면 회담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6자회담 재개노력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제시한 ‘중대제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경수로 대신에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중대제안은 미국의 ‘대북한 경수로 제공 반대’ 입장과 북한의 ‘에너지 지원 요구’ 입장을 절충해서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일련의 노력의 결과 제4차 회담이 열리게 되었고(7.26~8.7) 보름동안 지속한 제4차 회담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참가국들은 제2단계 4차 회담을 재개(9.13~19), 극적으로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

(9.19)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북핵위기의 해법으로 분명하게 제시했다. 참가국들이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사실은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 조치에 부응해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 남한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했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6자가 동북아의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하기로 했다.

제5차 6자회담은 11월 9~11일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과 돈세탁 혐의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체포되고 마카오의 북한 주거래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회담을 목전에 두었던 제1단계 5차 회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2단계 회담을 갖기로 하고 막을 내렸다.

많은 노력 끝에 공동성명을 도출했지만 6자회담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6자회담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크게 근본적인 장애물과 실무적인 장애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본적인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야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협상에서 제기될 실무적인 장애물이 극복되어야 6자회담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모두 북한의 요구사항들이다. 첫째는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폐기’ 주장이다. 경수로 제공 문제는 현재 6자회담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해있다. 북한이 공동성명이 체결된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9.20)를 통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핵폐기를 단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는 남한의 대북 전력지원 제안의 기본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핵폐기를 단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북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진전’ 입장이다. 금융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의 돈을 줄을 죄기 시작했다고 보는 북한은 제5차 6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으며, 북·미 양측은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에 대해서 양측이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논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왜 금융제재 조취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관훈클럽 토론회(12.7)에서 북한은 범죄정권이고 금융제재는 정치적인 제스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앞으로 6자회담이 구체적인 각론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핵 폐기의 단계와 기간 및 검증의 주체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6자회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10년 전 제네바 기본합의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어렵다. 회담의 의제가 훨씬 많고 개별 의제의 중량감도 높아진 것이다. 또한 참가국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즉 단순히 회담진행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6자회담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 검증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과거 핵 의혹은 남겨둔 채 주요 핵시설을 동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찰만 받으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 의혹을 뿌리 채 뽑는 광범위하고 최종적인 사찰이 필요하다. 사찰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폐쇄체제인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 전성훈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2005년도는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6자 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 등 다양한 수준의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책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안보, 통상 등의 분야에서 한·미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시킨 한 해였다. 특히 2002년 10월 이후 불거진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 양국 내에서 상승된 반미 감정과 반한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한·미 안보동맹관계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연장, 미래 한·미동맹구상협약 등이, 통상문제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문제, 한국인의 미국비자 발급 개선문제 등이 두드러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금년 들어 베이징에서 두 차례(3차 및 4차) 열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형성된 이래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등을 통하여 정책을 조율해왔다. 2005년에도 양국 간의 이러한 정책 협의가 이어졌다.

정상회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6월 중 미국을 실무 방문하여 워싱턴에서 부시 미국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6.11)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특별하고 강하며 중요한 전략적 동맹(unique, strong, important, strategic alliance)”이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조정 및 일부 감축, 방위비 분담 등 현안이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상호존중의 정신 위에서 양자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2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11월 17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정상회담에서는 제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 채택(9.19) 등을 계기로 양국 외무장관 회담과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 등을 통한 사전 준비 작업의 결과로서, 서문과 결어 및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경제·통상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모두 5개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동의 인식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향후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켜 포괄적·호혜적 동맹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이 취임한 직후 1월 31일 한·미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하고 곧 이어 반기문 외교장관이 방미, 2월 1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부시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관계 발전방향, 북핵 문제 등 한·미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3월 19~20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 한·미 외교장관 회담, 통일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문제, 한·미관계 주요현안, 남북관계 등 양자사안 및 지역적·국제적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7.12~13일간에도 한국을 방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발표(7.9)에 따른 한·미간 협력문제를 비롯하여 한·미 현안에 대해 우리 측과 협의하였다.

한편 주한미국대사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취임한 힐(Christopher Hill) 차관보가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4.23~26일

간 및 4.28~30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북핵 문제 관련 향후 대책 및 한·미 동맹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북핵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동행, 5.31~6.3일간 미국을 방문하였다. 제4차 6자회담이 7월 25일이 시작하는 주에 열리게 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은 7월 14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협의를 개최, 제4차 6자회담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 안보협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을 희망하였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지휘관계와 전 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04년 말까지 18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와 같은 한·미간 현안들을 해결한데 기초하여 한·미 양측은 미래 동맹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구성·가동하였다. 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6일 제5차 회의까지 열렸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재조정 추진상황, 군사임무전환, 연합준비태세, 그리고 안보협력증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전 시작전통제권이 지휘관계 연구의 일부임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및 협의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 관련 회담이 2005년도에는 3차(1.18~19, 서울), 4차(2.23~24, 워싱턴), 5차(3.15~16, 서울) 회의가 열려 분담금 총액, 협정 유효기간, 분담항목 등 주요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2005년 6월 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마크 민튼(Mark Minton)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향후 2년간(2005~2006년)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부담키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 등 통상문제도 한·미간의 주요 현안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 통상장관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5월 2일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포트먼(Rob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의 통상장관회담이 열렸으며, 제주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 통상장관회담이 역시 제주도에서 6월 3일 개최되었다. 양국은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진전 방안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문제, 스크린쿼터문제 등 양자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19일에는 우리 측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 통상 현안 및 FTA 협상 출범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FTA문제에 대한 정부 간 사전 실무점검협의 1차 회의(2.3~2.4, 서울), 2차 회의(3.28~3.29, 워싱턴), 3차 회의(4.28~4.29, 워싱턴)가 열렸다. 그러나 한·미간 FTA 체결은 아직 그 윤곽을 그리기에는 미진한 상황이다.

2005년도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Korea-U.S. Quarterly Trade Meeting)”도 제1차 회의(3.24~25, 워싱턴), 제2차 회의(6.16~17, 서울), 제3차 회의(10.26~28, 워싱턴) 등이 개최되어 지적재산권, 통신,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USTR은 4월 30일 1974년 통상법 제182조(통칭 Special 301조)에 의거, 90개국의 지재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점검보고서를 발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한국인의 미국방문 시 비자발급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제3차 한·미 시증워킹그룹 회의가 4월 14일 서울에서 열려 우리나라의 미국 시증면제 대상국 포함을 위한 양측 노력 현황 및 미국 비자발급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제4차 회의(9.15)와 제5차 회의(12.8)가 개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대상국 포함 여부는 해를 넘기는 사안으로 남게 되었다. 다만, 제5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영사 및 사법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사당국자회의를 매년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국내적으로 일부 집단 간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인천에 위치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 하이드(Henry Hyde) 국제관계위원장 등 5명의 하원 의원은 9월 15일 맥아더 장군 동상의 철거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는 요지의 서한을 미국주재 한국 대사관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러한 시도가 한·미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사회의 성숙된 역사의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9.19)되기 며칠 전(9.15)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유통과 관련 미국 금융기관들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와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제재조치를 내렸다. 동 은행은 북한 당국의 거래은행이었다. 이

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모략’이라며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통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철회와 6자회담의 재개를 연계시키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정부가 2004년 10월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제이레프코위츠(Jay Lefkowitz)를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하고, 그가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대두되었다. 그리고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가 12월 7일 북한의 달리 위조·유통 등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지칭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였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버시바우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12월 16일 한·중·일 3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동남아국가 등 40개국 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에 대해 브리핑했다. 반기문 외교부장은 내외신 정례브리핑(12.21)에서 “우리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통일부장은 방미 중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12.20)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적극 격려하는 서한(12.20)을 보내면서 특히 “이런 (범죄)정권을 위해 변명을 하려 하는(make apologies for such a regime) 사람들은 미국과 미국민

의 친구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2006년도 한·미관계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북·미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5차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간의 정책협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는 6자회담과 별개사안이라는 명백한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6자회담으로 연계시키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같이 대북 금융제재와 6자회담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의 선택을 강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과 북한 간의 공방 지속으로 6자회담의 재개가 계속 지체되면, 한국과 미국은 여타 6자회담 참여국과의 정책 조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거나 또는 그와는 반대로 6자회담의 재개가 지체되어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다른 출구가 필요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포럼의 형성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간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도 6자회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가 계속 거론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 사회 일부에서의 비판도 증대되고 따라서 한·미 관계에서의 우려사안이 될 수도 있다. 한·미 당국 간에 2005년도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장관급 전략대화의 출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합의되어 동 전략대화가 출범되면, 한·미동맹관계의 전략적 발전 협의는 물론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협의

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안보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일정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 연합 군사능력의 발전과 대북 억지력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SPI 회의도 계속 진행되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상호 입장의 조율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5년 국방당국 간에 합의한 대로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연구와 협의도 가질 것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2006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결정이 될 것이며, 지적재산권문제, 통신,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의 협의도 2005년도에 이어 계속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출범문제도 전향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박영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한·중관계

2005년은 한·중 양국 간 정치, 안보 및 외교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된 한 해로 기록된다. 특히 11월 한·중 부산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11.16) 양국 정상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의 협력과 발전방향, 역내 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한 중요한 한해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03년 한·중 북경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관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재확인하였으며, 4년 만에 개최된 한·중 북경 국방장관회담(3.30~4.2)이

실현됨으로써 기존의 양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증진되는 성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입장조율과 협력을 전개한 한 해였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여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2.10), 중국 당대외연락부 부장인 왕자루이와 닝푸콰이 한반도 대사가 평양을 방문하여(2.19~22)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후 주석은 친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북한의 6자회담 참여 무기한 연기를 간접적으로 반대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초,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표방하는 중국이 더욱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양국간 협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한국은 3월 8일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중국과의 관계 훼손을 우려하여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른 주한미군의 중·대만 문제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북 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주요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국방장관회담을 4년 만에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국방장관회담의 활성화와 국·과장급 실무회의를 1년에 두 차례씩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한·중 양국 간 외무장관회담(교토 5.7)과 6자회담 실무진 간의 회담이 예전보다 더욱

자주 개최되어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북한의 안전보장과 에너지 지원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한·중 부산 정상회담에서(11.16)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을 확인하고 6자회담 관련 각국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미국과 북한의 양보를 촉구하였다. 특히 후 주석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소위 미·북간에 이견이 돌출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인 북한의 선핵포기와 북한의 주장인 경수로사업 재개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2005년은 한·중 간에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해이었다. 첫째, 양국 간 교역액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2년 양국 간 무역액이 한미간 교역액을 처음으로 초과한 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5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 교역흑자 역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왔으나 흑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한·중 북경 총리회담에서(6.21~23)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양국 간 연구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에 발생한 한국 식약청의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사결과에 대해

중국이 한국산 김치의 중국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은 양국 간 경협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다. 양국관계는 소위 ‘김치문제’로 인해 양국 간 보복적인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으로써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11.16)과 외무장관 회담에서(11.15) 2005년도 양국 간 무역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계기로 2012년까지 교역규모를 약 2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앞서 중국에 먼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게 MES를 먼저 부여한 것은 한국의 대주변국 교역에 있어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중 외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외무장관 간의 핫라인 개설에 합의하였다. 이는 소위 ‘김치문제’로 인한 양국 간 통상마찰 확대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외무장관 간의 사전 협의방식을 구축한 것이다. ‘김치파동’과 같은 통상마찰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양국은 양국간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협의체를 2005년 내에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11.16).

환경 및 사회 문화교류와 관련, 한·중 양국은 西海의 오염, 환경변화, 심해자원에 대해 2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기로 합의(3.7)하는 등 환경보호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은 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은 西安에 한국총영사관 개설에 합의하였다(11.16).

한·중 양국 정상간에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의지가 표방되었음에도 국제문제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표명되지 못하였다. 대만문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공동 반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주목할 점은 2002년 한중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향후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양국 정상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공동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한국은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일본 외무장관의 방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중 양국의 일본에 대한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6년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할 것이고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신축성과 성실한 이행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향후 6자회담의 중요 주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단계적 실행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경협과 관련, 한국정부의 관세상 혜택 부여에 편승하여 중국상품의 대한국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중간단계의 기술력을 가진 중국상품이 한국으로 수입됨에 따라 한국상품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아울러 중국산 농수산품의 저가 수입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농수산품의 수익 제고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여 협정 체결을 위한 양 정부간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최춘흠·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한·일 관계

2005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 일본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6.20)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독도영유권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공조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인식차이를 드러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일본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검정용으로 공개(3.11)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2001년 출간한 현행판의 황국사관적 민족주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더 교묘하게 왜곡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식민지 지배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현행판의 기술은 빠졌고, 창씨개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이 일본식 이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일제 식민정치의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양국정상은 6월 20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활동이 중단된 제1기 공동역사 연구위원회에 이어 제2기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산하에 교과서 연구 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결과를 양국의 교과서 편수과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때부터 이웃국가들의 거부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

해 왔으며, 10월 17일에도 참배하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경우 정례 정상 회담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0.27). 이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정상적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대응전략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11.18)이 30분간 열리긴 했으나 현안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우호를 다짐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회담이었다.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1905)됐던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3.17)을 강행하였다. 한국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개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일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 유엔총회에서 52표를 가진 아프리카 연합(AU)과 일본 등 안보리 진출 추진 4개국(G4)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 단일화 협상(8.4)이 실패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국 등 ‘합의를 위한 단결’(UFC)국가들은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고 비상임이사국만 10여 개를 늘이되 ‘2년단임’조건을 ‘연임가능’으로 바꾸어 다양한 국가들을 안보리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교류협정 체결을 굳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도쿄(8.31)에서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을 만나 군사협정 조인을 포함한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당초 이번 윤광웅 장관의 방일중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6자회담 속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체결 시기는 다소 늦추기로 하였다.

양국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북한핵, 미사일 관련 정보교류와 해군, 해상자위대함정의 공동수색, 구난훈련 등 사안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한·일 양국간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무역불균형문제이다. 2004년 244억 달러였던 대일적자가 2005년에는 26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대일의존적 산업구조, 일본시장의 폐쇄성, 일본의 기술보호주의에 기인하지만 최근의 엔저(円低)현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우익인사들의 망언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근본적으로 아직도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 우익인사들의 영토욕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밖에도 6자회담 공조문제, 양국의 무역불균형문제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 김영춘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 관계

2005년 한·러 양국은 모스크바와 부산 정상회담 및 북핵문제 등 안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정치 안정과 경제회복 추세에 힘입어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가 활성화되었고 한국 대기업의 대러 투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5.9), 한·러 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메시지 교환(9.30),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실무 정상회담(11.19)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러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최상의 수준을 실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채택, 푸틴 대통령의 평화 변영정책 지지, 인적교류 증진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교, 경제, 학계, 언론계 등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인사 7명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11.14~20)하였다. 이들은 방한 기간에 외교안보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전자,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안보·군사 분야에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및 고위인사 회동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 결과 북한의 핵보유 선언(2.10)이후 제4차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채택 등이 이루어지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유리 발루예프스키 러시아 총참모장이 김종환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한(3.21)하여 양국 간의 군사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과 한·러 국방장관 회담(4.22)을 갖고 양국 사이에 비행정보 교환용 긴급 통신연락체계(핫라인)를 조기 설치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실무급 대화·접촉을 활성화하고 군사기술과 방산·군수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측은 자국산 무기구매를 우리 측에 집요하게 요청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경찰청은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함께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동해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합동으로 고강도 해상구조 및 대테러 훈련을 실시(9.22)하였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1995년 해상수색·구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해상수색구조협약」(SAR) 체결 10주년을 맞아 한·러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 간 교섭(2002.8)으로 시작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협력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한·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상호협력협정」을 체결(10.6)하였다. 한국군이 현재 운용중인 호크(Hawk) 미사일을 대체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2010년까지 개발할 목표로 러시아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면에서, 푸틴 정부의 think tank 역할을 해오고 있는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한·러 경제포럼이 개최(1.31)되어 양국 산·관·학계 인사들은 경제통상 협력방안, 러시아의 중기(2005~2008) 사회경제 개발계획,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계획, TKR-TSR 연결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4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한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전력연계를 위한 국제회의’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2.2~4)되었다. 이는 2002년 12월 시작해 4회째 맞는 회의로서 남한의 한국전기연구원과 북한의 조선에너지민족위원회, 러시아의 보스톡 에너지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2004.9) 한국석유공사가 로즈네프트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결과, 양측은 모스크바에서 서캄차카 광구 탐사작업을 위한 재무협약을 체결(2.22)하고 본격적인 석유탐사에 착수하였다. 자원정상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세를 배경으로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 중 하나인 LG전자의 가전공장 기공식(4.19)이 거행되었다. 이 공장은 모스크바 근교 15만평 부지에 2006년 4월 완공예정으로 건설되는데 세탁기와 냉장고, PDP/LCD TV, 오디오 등 4개 제품을 각각 연간 100만대씩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LG 상사가 2004년부터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과 추진한 30억 달러 규모의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수출 프로젝트는 타타르스탄 정부와 계약당사자인 현지 석유회사 '타트네프티'의 방침 변경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연방상의회와 공동으로 한·러 간 민간경제협력 채널인 「한·러 경제협력위원회」창립총회를 양국의 주요 기업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개최(9.27)하였다. 정우택 삼성물산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31개사 44명의 경제인들이 참여하여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자원 및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양국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증진 및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KOTRA는 국내업체의 시베리아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해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중심지이자 천연자원과 첨단과학의 보고인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 무역관을 공식 개설(12. 1)하였다.

2006년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회복 추세, 한국의 대러 투자 확대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이르쿠츠크·사할린 총영사관과 노보시비르스크 KOTRA 무역관 개설 등으로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한·러 정상이 2005년 채택한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MES)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시베리아 중심지에 KOTRA 무역관 개설 및 모스크바 시내에 21층 롯데백화점과 사무실의 2006년 말 완공으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가속화되는 한편, 자원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II

북한정세

1. 대내 정세

가. 정치동향

북한에게 있어 2005년은 노동당 창건 60주년, 해방 60주년, ‘선군영도’ 10주년,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중요한 정치일정을 맞아 주민결속과 내부통제를 유지·강화시키는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북·미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정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치체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당 창건 60주년(10.10)을 맞아 “올해는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온 투쟁의 한 해, 승리의 한 해였다”고 자평하였다.

2005년 북한의 정치정세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어는 또 다시 ‘선군’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2004년 마지막 날(12.31) 선군정치 개시 1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선전한 데 이어, 2005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당 창건 및 해방 60주년에 대한 준비 과업을 부여하고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선군혁명총진군’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개최(2.2~3)하여 10년간의 선군정치의 경험과 성과를 결산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의 기치 아래 국민일치로 ‘총돌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하면서 선군혁명총진군의 목적과 의의로 ‘전 사회·분야의 선군사상화·선군정치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는 신년사설에서 제시된 정책 추

진을 독려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145개의 공동 구호를 발표(7.2)하고, ‘100일 전투’ 기간(7.3~10.10)을 설정하여 노력동원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올 한 해 동안 선군혁명총진군을 앞세워 대미 강경대응 자세를 고수함으로써 주민들의 단결과 충성심을 고취하고자 의도하였다. 북한은 선군혁명총진군대회 직후에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 방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2.10), 주민들의 전쟁발발과 체제붕괴의 위기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대내 분위기의 일신을 통한 내부 단결과 충성심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이 같은 선군정치에 부합하게 전개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공개활동 중 절반 이상을 군관련 행사에 할애하였고, 특히 군부대시찰에 많은 시간을 집중함으로써 체제유지의 근간인 군의 사기진작과 절대 충성을 유도하고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한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127회(2004년 92회, 2003년 92회, 2003년 99회)의 공개활동(12.22 현재)을 전개하여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외부에 과시하였다.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실세들의 신상에 변고가 생긴 것을 제외하고 핵심엘리트층에 큰 변화가 없는 데에서도 파악되었다. 다만 김정일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10.22)하였고, 또 정하철 선전담당비서 겸 선전선동부장 등 일부 실세들은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정하철의 신변 이상은 당 조직의 양대 축인 조직(장성택 제1부부장)과 선전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두 변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목되었다. 이는 군 보위사령부

(2003.7)와 인민보안성(2004.7)의 책임자 교체와 함께, 내부통제의 강화를 위해 일부 핵심엘리트층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당과 내각의 일부 인물들이 교체되고 있고,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세대교체의 연장선상에서 실무형 중심의 소위 혁명3세대가 각 권력기관의 전문부서 책임자나 중간급 간부로 충원되는 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5년 당에서는 황해남도과 자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새로 임명되었고, 내각에서는 금속공업상, 기계공업상, 건설·건설공업상, 문화상, 노동상 등이 교체되었다.

이 같이 체제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연례 정치일정을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3차회의를 한 차례 연기한 후에 개최(4.11)하여 3년 만에 예산총액을 발표함으로써 재정체계의 정상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에 의미 있는 주요 기념행사들을 성대하게 치러 냈다. 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주요 간부 및 군인·근로자 등 10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년 만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열병식 및 시내행진, 다양한 경축행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문화시설을 건설하여 과업 달성을 선전하였다. 특히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아리랑 공연」을 개최(8.16~10.10)하여 평양시민들은 물론 지방주민들까지 대거 관람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김일성·김정일의 업적과 선군정치를 부각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대외·대남 평화이미지를 제고하고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끝으로 2005년도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미확인된 정보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분석에는 대체로 김정일 위원장 직계에 대한 우

상화 작업 및 후계대상의 위상 변화,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권력엘리트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강조점 변화, 세대교체의 급진전 등의 근거들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후계자로의 권력분점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및 권력승계에 대한 정당화 작업 등 후계체제 기반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현재화되지 않았다.

2006년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하는 한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며, 커다란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당·정·군 및 보안기구를 통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정치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될 2006년 정치정세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군정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대비, 선군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내부결속과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둘째, 혁명1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이외에 핵심엘리트층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엘리트층이 대폭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대회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등 정상적인 정치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내각의 전문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30~40대의 혁명3세대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당·군의 실무부서에서도 인사이동이 점차 두드러질 것이다. 셋째, 7차 당대회 개최는 아직 때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정통성 확보와 권력 공고화를 통해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등에 의한 대외적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내부 경제상황 또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뿐 회복국면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도 아니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대내외에 제시할 만한 능력이 부재하다. 넷째, 체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당적 지배의 약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의 행정대행 금지 및 부패한 당 기구 개편과 인원 축소가 점진적으로 모색될 것이다. 다섯째,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능력 약화와 외부세계의 대북 인권 압박 그리고 시장화의 확대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탈린적’ 지배의 인간화가 점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한적인나마 자의적인 국가폭력과 억압적인 국가기구에 대한 법·제도 개선조치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안에 후계자 지명을 가시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 검증 및 조건 구비에 대한 준비를 차치하고라도 대내외 위기국면에서 지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후계자 지명은 자칫하면 체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장 후계자를 지명하기보다는 ‘인사’와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담보할 수 있는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계 후보군과 접촉하고자 하는 당·정·군 및 기능집단의 견제 및 영향력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 송정호 ·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나. 경제동향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2005년에는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를 가장 주요한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은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당국이 농업부문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데에는 지난해 전력생산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과 함께 식량 공급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에너지의 추가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 개최된 제11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박봉주 내각총리의 의정보고를 통해 “농업전선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2005년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보고를 통해서 예산수입은 15.1%를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서 ‘국가기업 이득금 수입’을 13.5%, ‘협동단체 이득금 수입’을 8.4%, 사회보험료 수입을 3% 늘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11.4% 늘리고, 농업부문의 생산력 증대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에 맞추어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가장 큰 폭(29.1%)으로 증가시켰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문에 14.7%, 무료 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인민적 시책’부문에 10.3%를 증액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2005년도 북한의 경제개혁은 다소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량배급제의 정상화 조치이다. 식량 배급제 정상화 지침이 하달되자, 지역의 사정에 맞추어 배급량과 배급방식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급대상을 차별화하고 시장에서의 식량거래를 금지시켰으며 폐기발 생산량을 배급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다. 새 공급제도에 따르면, 공장이나 농장 등 일터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사람은 싼 가격에 배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싼 가격에 배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적으로 일군 경작지에서 생산한 식량을 배급으로 간주해 식량공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고 여유분은 국가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은 각 농장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곡을 정확히 추산하고 경작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12월 22일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총 127회이며, 이 중에서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총 19회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활동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경제부문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경제부문의 현지지도는 작년에 이어 '기계공업'부문에 치중(총 5회)되어 있어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설비의 개선과 기계장비 공급의 확대를 통한 현대화사업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3차례나 방문하였다.

금년도 북한은 에너지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완공에 주력하면서 전역에 3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대규모 수력발전소로는 예성강, 태천 3~5호, 삼수, 어랑천, 금야강, 영원, 원산청년 등의 수력발전소를 완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기존 발전소의 노후한 설비를 개보수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발전소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속적인 수력발전소 건설과 노후설비 대체에 힘입어 북한 전력사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 생산 증대의 한계로 전반적인 전력사정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공업부문 성과는 2004년의 호조 현상을 지속하였다. 올해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동향에 따르면, 여러 부문의 공장·기업소들이 올해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는바, 전자공업부문은 계획의

125.3%를 달성하였으며, 육해운성에서는 무역선 화물수송량 119.2%, 국내선 화물수송량 122.2%, 자동차화물수송량 113.7%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5월 30일, 기존의 금속공업기계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금속분야와 기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공업부문의 생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당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특징적인 경향은 생산 정상화를 통한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개선도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주요 건설 성과로는 희천정질유리그릇공장, 부전감자전분공장, 라선 기초식품공장 및 신의주콩우유공장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업부문의 성과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10.13)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40만톤이 증가한 39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 증가는 좋은 기후와 남한으로부터의 비료 지원, 그리고 북한당국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당국은 식량증산을 위해 전국 43개 주요 생산지에 과학자·기술자·대학교원을 파견하여 연구사업을 진행(4.20)하였으며, 과학적 영농화 작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농업성 산하에 「과학농사 확대 도입 중앙지휘부」를 설치(5.10)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증산을 위한 관개시설물 공사에서 함흥시 수동저수지와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완료(10.2: 준공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전시회·투자설명회·토론회 개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월부터 3월까지 흑룡강성, 북경, 사천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2월)하였다. 5월에는 평양에서 ‘무역토론회’와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5.16~19)하였고, 파리에서 ‘투자상담회’를 개최(5.24)하였다. 9월에

는 무역경제대표단이 중국의 길림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투자박람회에 참가(9.2~6)하였으며, 멕시코시티에서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9.7)하였다. 10월에는 북한 외무성이 EU·나우만재단과 공동으로 ‘북한-EU 경제개혁 워크숍’을 개최(10.11~14)한데 이어, 평양에서 제1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10.24~27)하였다.

금융부문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참가(6.14)하였으며, 중앙은행 대표단도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등 금융부문의 선진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교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고려은행과 영국의 글로벌그룹이 합작으로 ‘고려·글로벌신용은행’을 설립(6.3)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금융분야의 선진화를 통해서 국제금융자본을 도입하고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 증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9월 중 북한의 대중·일 총 교역규모는 13.4억 달러로 대중교역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5.3%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수출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수입은 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북한의 대남한 교역 규모는 7.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0.1%가 증가하였다.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한 북한은 올해 고성능병렬컴퓨터체계 개발, 조류독감예방약 개발 등 총 2,500여건의 첨단과학 연구 성과 및 발명이 이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는 「과학원」을 「국가과학원」으로 환

원시켰는데, 과학연구기관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문제의 해결이 가속화되지 않는 한 2006년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이 힘입어 국내의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계획부분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빈부 격차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각의 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기능과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가 식량 공급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식량배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식량의 암시장가격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식량의 시장거래를 다시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대외개방적인 조치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에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의 개선, 국제 금융협력의 증대와 국내 금융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인들의 대외접촉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대와 투자확대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전시회·투자설명회·토론회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대표단의 파견 및 연수활동도 확대될 것이다.

결국, 2006년도 북한의 경제정책은 선별적·보수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노력의 지속으로 특징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외부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2006년도 북한경제의 생산실적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임강택 ·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05년도 북한에서는 공식부문의 경제체제가 침체되고 암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양성화한 이래 전통적 사회질서가 흔들리고 시장논리에 의한 새로운 사회질서가 생성되는 등의 과도기적 혼란기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혼란기에 북한 당국은 효과와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사회통제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당국의 통제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대북지원이 활발할수록 북한의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사회동원과 사회통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치구호는 선군정치였다. 특히 2005년은 선군정치 개시 10돌이 되는 해로서 이 구호를 더욱 대대적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 개시 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2004.12.31)를 개최하여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슬픔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낸 것은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면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선전하였다.

또한 북한은 선군혁명총진군대회(2.2)를 개최하여 당창건 60돌 및 광복 60돌을 맞아 선군혁명총진군을 벌일 것을 전체 군민에 호소하였고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2.22)

한 데 이어 당창건 및 광복 60돌을 빛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릴 것을 촉구하면서 군중대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북한은 각 지역별로 열린 군중대회를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결의, 정치사상사업 강화,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또한 선군청년선구자대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2.26)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청년중시정책을 선전하였고 청년절(8.28)을 맞아선군정치를 핵심개념으로 하는 사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전 사회적 총동원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의도하였다. 대내적으로 선군정치에 대한 당위성 부각 및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군민간 단결된 모습을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군정치와 더불어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동원의 핵심구호의 하나는 반미주의였는 바, 북한은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의 대결을 부각함으로써 체제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반미사상교육을 위하여 평양, 개성, 사리원, 원산 등 주요 거점에 계급교양관을 건립하여 반제사상교양,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가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는 등 주민들에게 비타협적 투쟁 및 사회주의 우월성 등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을 지속하였다. 평양소재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군인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2002년 7월 개관 이래 144 만명(하루 평균 2,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5.19)되었다. 「조선중앙TV」도 “잊지 말자 신천땅의 원한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5.25)하고 ‘원수들과 싸우면 살고 굴복하면 죽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미적개심을 고취하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방북자의 관찰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의 반미사상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사회일탈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개정된 법률을 포함한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였다. 북한은 2000년에 각 부문이 법률 103개를 종합한 법전을 대외비로 발간한 바 있으며, 2004년 8월에는 시행중인 법률 111개를 수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간하였다. 대중용 법전에는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나타난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단속·처벌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항들이 대폭 추가된 형법이 포함되었다. 구법에서는 41개에 불과하던 경제관련 조항이 신법에서 104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경제관리를 침해한 범죄관련 조항(5장 2절)이 종전 18개에서 74개로 확대된 것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사회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또한 북한은 중국 왕래와 비사회주의적인 일탈이 빈번한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 상반기까지 중앙당 ‘비사회주의그루뵏’이 조직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기획적 단속이 진행되어 왔다.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새별군을 검열하였다. 한국도주 기도, 중국 도강, 외국영상물이나 선전물 검열, 고리대금업자, 비사회주의활동에 관련한 것들이 주요 검열사항이었고, 보안원, 보위부지도원, 검찰소 관계자들까지 검열대상에 포함되었다. 북한 당국은 검열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민들을 산간이나 농촌 지대로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점증하는 시장화 추세를 속도조절함으로써 사회일탈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가령, 10월부터는 배급제를 재개하고자 시도하였다. 시장에서 식량매매를 금지하고 우후죽순처럼 번성하는 식당 업체들을 통제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또 한편으로 북한은 집단제조 아리랑 공연을 실시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치적을 선전하고 우상화하는 홍보행사도 실시하였다. 연인원 10만

여 명(카드섹션 1만 8천명)이 참가하는 아리랑을 장기공연(8. 16~10월 말)하여 주민들의 관람을 적극 유도하였다. 관람일정을 사전에 조직하여 지방주민들을 전용열차 및 버스로 동원하였다. 아리랑공연에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9월 중순 대외초청영접위원회를 조직한 데 이어 「조선인포뱅크」를 통하여 관광객을 적극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에서도 7천여명이 관람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동원과 통제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은 일부 긍정적 효과도 얻었지만 경제난과 시장요소의 확대에 의한 사회변화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회통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를 담당하는 간부급 요원들이 시장과 결탁하여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 식량사정이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나, 주민들이 장사나 폐기물을 비롯한 소토지 개간 등을 통해 살아갈 방도를 터득하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고와 고율의 세금이 북한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쌀값은 2004년 3~4월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2005년 3~4월까지 대체로 350원선에서 거래되던 쌀값은 6월 500원대, 8월 800원대, 9월 1,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북한의 시장에서 물가가 인상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중국의 영향, 북한의 평가절하, 국제사회의 지원량 증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과도한 세금이다. 이전에는 전기세 등의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지만 현재는 세금이 매우 과중하다. 가령 주택세,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이 수십 배로 올랐다. 농촌 역시 마찬가지이다. 협동농장의 경우, 소출의 일정량을 국가에 내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토지비옥도에 따라 1등급은

평당 40원, 2등급은 32원, 3등급은 24원을 세금으로 내며,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개간한 폐기밭도 평당 12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생활이 악화되자 2000년 이후 감소하였던 ‘꽃제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당국의 오랜 정치교육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좌절감, 허탈감, 배신감을 느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가령, 주체사상이 논리에 맞지 않고, 가장 반주체적인 나라가 북한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념, 생활적인 것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주민 사이에는 “언젠가는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 속에서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생각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각자가 출로를 고민하면서 달러를 모으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06년에도 북한사회의 변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경제난과 시장요소의 도입으로 인하여 유인되는 변화이고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밑으로부터 주도되는 변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동인에 의하여 추동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통제는 더욱 해이해질 것이고, 7·1 조치에서 경험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사회적 이완을 점차 용인하여 자율적으로 제어하도록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서재진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2005년 북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선군이데올로기를 확립해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선군혁명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인민군대’의 선군혁명의 기능과 역할 등을 부각시켰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최고사령관(김정일)의 ‘제일결사대’, ‘제일충폭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역점을 두는 선전선동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강화’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군의 사기진작과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 유도 차원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72호」를 통해, 중장 3명, 소장 31명 등 총 34명에 대한 장령 진급 인사를 발표(4.14)하였다. 원수·차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공동결정으로, 기타 장령급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임명하였다. 이번에 진급한 인물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염승일, 최중화, 전관식 등이고, 대좌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조성환, 심정택, 선길남, 김병기 등 총 31명이었다. 이는 특별한 진급행사라기보다 거의 연례적인 행사에 해당한다. 북한은 김일성생일(4.15), 군창건일(4.25), 정전협정체결일(7.27), 당창건일(10.10) 등을 계기로 연 1~2회 군 장령급 진급인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김정일은 하부단위 군부대까지 직접 시찰함으로써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직접 배려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5년 공개활동 총 127회(12.22, 현재) 중 49회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군부대 시찰에 할애함으로써 군의 충성유도에 주력하였다.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 독려를 위한 선전선동 활동 역시 지속되

었다.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 하에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를 구비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군사적 슬로건이 반복되었다. 군민관계 강화를 위해 주민들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군인품성을 적극 본받도록 독려되었다.

북한 당국은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김정일은 군현지지도 시 국방공업을 군사경제력의 기초로 인식하고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북한은 물리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장사정포,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 즉 240mm 방사포 천마호 전차 성능개량, 미사일 엔진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대외적 군사교류활동은 전년도와 달리 다소 약화되었다. 제3세계 비동맹 전위대 국가에 해당하는 쿠바 등과 군사기술 교류협력 외교를 제외하고 대외적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쿠바 군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5.4)하여 이명수 대장(총참모부 작전국장)과 레오나르도 안도요 발데스 중장(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을 대표로 하는 북-쿠바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반제공동투쟁에서 맺어진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관계 도모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5.5)되었다. 양국은 군사 분야 이외의 당·내각·단체 등의 교류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도에도 북한은 문화대표단(2004.5)과 노동당대표단(2004.11)을 쿠바에 파견하였고, 쿠바는 경제대표단(2004.9)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2006년도에도 북한은 선군이데올로기 확립을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에 대한 독려 또한 지속할 것

이다.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 하에 전투정치훈련 강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 구비 등과 관련한 선전선동활동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군민관계’ 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도 변화 없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 군사력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목표를 통해 체제안정화를 기하려 할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정적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치로 군사를 우선하는 전방위적인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독려하기 위한 김정일의 군 현지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보다 더욱 활발한 대외 군사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장비 및 기술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군사외교활동을 늘어나갈 것이다. 특히 쿠바 등 제3세계 우방국가들과의 군사기술 교류협력을 위한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남관계 차원에서 북한은 해상침투 및 DMZ 도발 등과 같은 대남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군사적 강경정책은 가능한 한 자제할 것이다. 단, 6자회담의 진전여부 및 남한의 대내 정치상황에 따라 남한의 군비증강, 한·미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면서 NLL 침범이나 DMZ 도발 등과 같은 모험적 대남 군사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제적 파장과 미국의 직접적인 반발 여파를 고려해 볼 때 핵실험 강행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나 핵개발 확대를 시사하는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대남 군사적 ‘유화책’을 동시에 펴나갈 가능성도 있는바, 장성급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주요 대외 관계

가. 북·미 관계

2005년도 북·미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시작하였다. 2004년 통과된 「2004년 북한인권법안」이 시행되고, 미·일협조가 강화되는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집권 2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정부는 대선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으로부터 위임(mandate) 받은 것으로 인식, 기존의 대외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켰다.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6자회담을 무기연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2.10)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핵보유의 당위성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서 비롯됨을 역설(3.2)한 데 이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이제는 6자회담에서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균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근원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핵 위협을 청산하고 우리와 유관국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조선중앙방송』(5.11)은 5MWe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최단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강조하고 비난의 톤을 낮춤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3월 아시아를 순방중이던 리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언급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스터 김정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뉴욕 접촉(6.6)에서 디 트라니 북핵대사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6.8)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7.9)하자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침공의사가 없으며, 6자회담 틀 내에서 쌍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측의 입장 표시를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의 철회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기 전 6자회담이 단순히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을 담보하는 안전판을 만드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

히 비핵화 실현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7.22)하였다. 『로동신문』은 6자회담은 북한의 일방적 핵폐기가 아니라 북·미간 평화공존이 관건(7.24)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제도전복 야망을 버리고 우리나라와의 평화적 공존의 입장에 선다면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종전과 같이 우리에게 대해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사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고 기술하였다.

6자회담이 개최(7.26~8.7)되어 유례없이 긴 회담이 계속되었으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주장으로 ‘원칙선언’을 도출하지 못하고 휴회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군사용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갖을 수 있으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9월에 재개된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 도출(9.19)에 성공함으로써 북·미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반면 관련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존중하며,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핵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미관계는 기대만큼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제5차 6자회담이 개최(11.9)되어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차기회담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폐회하였다.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폭군(tyrant)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후 미국 고위관료들의 대북

강경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북·미관계가 긴장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화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을 문제삼아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금융제재 해제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서 근본문제이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며 회담 개최를 미국측에 촉구(12.2)했으나, 미국은 이 문제가 회담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법에 따라 취해진 금융제재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돈세탁, 위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 집행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12.7)했다. 나아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하였다. 조지프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에 대해 추가 경제·금융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정권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12.9)하였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하고 위폐를 만들며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12.12)하였다.

한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권 국제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을 긴장시켰다. 동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는 ①탈북자 보복중단, ②정치범수용소 해체, ③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④재판없는 구금, 공개총살 중단, ⑤어린이에게 식량의약품 우선 배분, ⑥한국정부의 방관적 태도 개선, ⑦북한주민에 대한 따듯한 지원, ⑧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범죄국가 발언에 대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역대 미

국대사들에서도 처음 보는 폭언”이라고 비판하며 버시바우 대사의 추방을 요구(12.9)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뒤엎는 중대사태라고 규정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2006년도 북·미관계 역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두고 많은 진통을 예고한다. 미국은 가능한 한 6자회담을 북핵의 동결과 해체를 위한 회의로 국한시키고자 하는 반면, 북한은 6자회담을 생존을 담보받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더욱이 2005년 말에 불거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미국 고위관료들의 대북 강경발언 등에 대하여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6자회담과의 연계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공동성명 이행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암시라기보다는 6자회담 이행을 위한 대북 압박용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강경책보다는 외교적 방식을 통해 풀고자 하는 이유(이란의 핵개발, 이라크 불안정, 카트리나 이후의 국내문제, 북한의 군사적 반격 가능성, 한국정부의 입장)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동결 수순에 들어가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로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핵동결 조치가 준수되고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가 북·미간 관계정상화로 가는 첫 관문임을 감안할 때, 북한측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도 북핵 해결의 외교적 업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폐기 이행방안과 관계정상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북·미간 합의

가 이루어진다면, 2006년 상반기 중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힐 국무부 차관보, 혹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워싱턴을 방북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고위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진 후에 북·미간 연락사무소는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될 것이다.

● 최진욱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북·중 관계

2005년은 전년도까지 유지되어 왔던 북·중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전개된 교류와 협력은 양국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북한은 1단계(7.25~8.7)와 2단계(9.13~9.19) 4차 6자회담에 참가해 9·19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른 제5차 6자회담(11.9~11)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국은 정상회담(10.28~30)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할 당시에도, 중국과 북한은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전개했다. 북한이 대중 협의나 사전통보 없이 핵 보유를 선언(2.10)함으로써 양 국간의 이견이 노출되자, 중국은 북한과의 협의 채널을 재가동시켜 양국관계의 강화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2.19~23)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골자로 한 후진타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의 일환에서 북한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에 대한 미국·일본 등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공식적인 지지(3.16)를 보내는 한편, 경제대표단의 방중(3.15~19)과 박봉주 내각 총리의 방중(3.22~27)을 통해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3.22)함으로써 경제적 실익도 확보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4.2~5)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북·중간 협조 문제를 논의하였다.

중국 역시 양국 간 친선관계 강화 차원에서 당·정 및 주요 단체의 대표단을 잇달아 방북시켰다. 대표적으로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연이은 방북(3.29~4.2, 7.9~12)과,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대표단(5.10~14) 및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대표단(5.24~28)의 친선방문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10.10)을 축하하기 위해 정부대표단의 방북(10.8~11)도 추진했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6자 회담 참가를 설득시키려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북한의 제1단계 4차 6자회담의 참여를 설득시키기 위해 중국은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후진타오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7.12~14)시켰으며, 제2단계 4차 6자회담의 참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파견(8.27~29)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5차 6자회담에 대한 참가를 확인하기 위해 후진타오의 방북도 추진하여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10.28~30)은 2005년도 북·중관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정으로 기록되었다. 후진타오의 이번 방북은 장

쩌민의 방북(2001.9)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이라는 점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2004.4)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된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전통우의를 공고화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며, 호혜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정일 위원장도 "조·중 친선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10.28)하였다. 후진타오는 방북기간 동안 '조·중우의탑'을 참배하였고, 중국의 무상원조(약 2,400만 달러)로 완공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방문했으며, 김정일과 함께 '아리랑 공연'도 관람했다. 김정일은 공연 말미에 '조·중 친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쌍방 간 외교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관심사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중국은 올해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성 발언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경제 원조와 협력을 확대하는 실리를 확보하였다. 이 회담에서도 북한의 제5차 6자회담 참가에 대한 대가로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10.28)하였다. 올 3월 체결한 「중·북 투자 보장협정」으로 인해 유통, 건설,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협정을 통해 향후 중국의 선진기술이 북한에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는 경험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5년 1월~9월 북한의 대중 무역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 8.8억 달러에 비해 34.2% 증가한 11.9억 달러

에 달했다.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의 3.4억 달러에 비해 8.7%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고, 광물성 연료, 수산물, 광석, 철강 의류 등 5대 수출품목이 86%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의 5.3억 달러에 비해 50.7%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했고, 광물성연료, 육류, 기계류, 곡물, 전기기기 등 5개 품목이 55%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북·중 간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개발과 연계된 경협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같이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는 강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물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강화된 중·북관계의 결과를 나타내는 후진타오의 방북은 향후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이념의 차원보다는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양국관계의 주요 현안인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북·미간 갈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북·중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의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병곤 ·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다. 북·일 관계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는 제2차 평양방문을 단행하였지만, 일본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의 불명확,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가짜 의혹문제 등으로 북·일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직된 북·일관계의 후유증은 2005년에 접어들어서도 지속되었다.

제4차 6자회담을 앞두고, 9월 일본의 대북한 접근이 시도되고,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11월 초에 1년만에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재개되었지만, 상호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2004년 제2차 평양 방문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긍정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납치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북한 강경 노선의 추구하고 더불어 국교정상화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직후, 여론은 조기 국교정상화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민·공명·민주 3당은 2004년 5월 26일 회의를 갖고 북한 선박 등의 일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선박 입항 금지 특별조치법’을 수정·합의한 뒤, 6월 3일 중의원에서 가결하였다. 이는 일본 정치권이 ‘대화와 압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평양선언의 준수에 따른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문 후, 북·일간에는 공식 및 비공

식 실무 수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4년 7월 8일에는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명의 딸이 싱가포르를 거쳐 도쿄(東京)로 왔고, 이어 동년 8월 11~15일의 북·일 납치문제 제1차 실무자회의 및 9월 25~26일의 북경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 행방불명 10인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2004년 11월 9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납치문제 제3차 실무자회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받아 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2차 실무자회의 직후에 연내로 예정했던 대북 2차 경제지원을 보류하려 하였고, 12월 8일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임을 발표함과 더불어 12월 9일에는 12만 5천톤의 식량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민당은 5단계로 구성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일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대화중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및 가짜 유골문제 문제 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는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였다.

북한 역시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하였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평양방문을 계기로 재차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및 가짜 유골문제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면서 불편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본인 납치문제 및 가짜 유골문제 문제 등에 의한 후유증으로, 북·일 관계의 갈등은 2005년에도 지속되었다. 심각한 교착 국면에 빠진 북·일관계는 2005년의 상반기 내내 갈등을 노출하였다.

그런데, 제4차 6자회담에 기대가 모아지고,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자, 정치적 기반이 한층 강해진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에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북·일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면 아래 및 수면 위의 교섭을 전개하며 교착상태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고이즈미 총리는 대북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9월 13일 즉, 6자회담 속개 하루 전인 13일 김정일에게 보내는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통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하였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에도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며 제4차 6자회담의 타결(9.19)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관계의 개선 및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의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따라서, 교착상태의 북·일관계는 9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미,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 11월 3~4일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1년만에 재개되었고, 일본인 납치 생존자의 귀국문제와 가짜 유골 의혹 문제를 둘러싼 북·일 정부간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일 정부는 상호 다른 입장의 차이만을 드러내었다. 일본측이 가짜 유골 의혹과 일본인 납치 생존자의 귀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과거사 청산 등도 요구하였다. 즉, 북·일 양측은 협의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팽팽한 입장의 대립을 노정하였다. 북·일 양측은 대화와 협상의 틀 유지에만 합의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국교정상화를 향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현재,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의 악화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정치권과 언론의 대북한 강경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가 순탄하게만 진전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11월 3~4일의 베이징 회담에서 일본측이 (1)납치문제, (2)과거사 청산, (3)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한 것은 ‘대화과 협상의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2006년도 북·일관계는 양자의 이해에 따라 국교정상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화과 협상의 채널’은 유지하되, 북·미간의 급격한 진전 등 외부로부터의 중요하고도 커다란 영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수면아래’와 ‘수면 위’에서의 대화과 협상을 되풀이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 관계

북·러 양국은 2005년에도 정상 간 친서전달이나 특사파견,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기존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였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이나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간 경협이 장애요인이었던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안드레이 카를로프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요청으로 대사관을 방문(3.8)하여 푸틴 대통령이 보낸 제2차 세계대전 승리 60주년 기념메달을 받았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2002년 이후 4번째 러시아 대사관 방문이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5.9)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해주길 희망하는 초청장을 발송(3.31)하였으나 북한은 리종산 북한군 차수와 김옥순 위원을 참석시켰다. 8·15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8.11)를 푸틴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8.15)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푸틴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와 노동당 창건(10.10) 6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평양을 각각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 등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극동 간의 무역 및 경협 확대, 6자회담,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그동안 러시아의 대북 창구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개혁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격해임(11.14)되고 후임에는 전 카잔시장인 카밀 이스하코프가 임명되었다.

안보·군사 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2.10)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안보우려를 이해하는 한편,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최선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고르 로가체프 주중 러시아대사는 러시아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및 북한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18). '9·19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 6자회담의 향후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공식성명을 발표(9.19)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NPT 복귀 시, 러시아형 경수로가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1.27)에 의하면,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2004년부터 참여하여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부품 수출을 저지하는 데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이란에 수출하는 미사일부품을 러시아 영토를 거쳐 운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차단을 시도했으나 단속계획의 노출로 미사일부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제면에서,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 가즈프롬사 대표단이 방북(1.20)하여 박봉주 내각총리 및 정철윤 원유공업성 부상 등과 면담하였다. 이들의 방북 목적은 시베리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 및 한국 연결 시 북한에 대해 가스를 무상제공하는 문제 또는 천연가스 및 유전 등 북한의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방북 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에게 함경북도 라선시 정유공장과 승리화학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유의 무관세수출 방침을 통보(8.16)하였다. 또한 양측은 교역확대 방안과 TSR-TKR 연결사업, 임업 분야에 대한 북한 노동력 유치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교역확대를 위해 김영재 북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부주지사와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결성 합의서」를 체결(10.5)하였다. 앞으로 공동실무단은 매년 평양과 사할린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할린과 북한 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구축을 모색하며 양측의 대외무역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방북한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과 제5차 6자회담 의제들을 사전조율하기 위해 “양측이 미해결 상태인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가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11.8).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일행이 방북(12.5)하여 김영재 북한 무역성 부상 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장 등과 경험방안을 논의하였다.

TSR-TKR 연결사업 면에서, 모스크바에서 제1차 남북한-러시아 철도전문가 회의가 개최(2004.4)되었으나 제2차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통신 보도(8.9)에 의하면, 북한은 2004년 말에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TKR-TSR 연결 논의를 위한 3개국 간 제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러시아측에 통보하였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축노동자는 약 2,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때문에 자신이 배속된 지역을 이탈하여 다른 지역에서 불법 노동자로서 외화벌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국제난민으로 인정받아 제3국이나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6년 북·러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기존의 선린우호관

계를 지속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회복이 동북아 및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2006년 초 러시아는 ‘무역대표부 해외조직망 개편령’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소련 공화국 등 8개국에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대신, 북한 무역대표부를 폐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북·러 양국 간 교역은 북한의 대러 채무 해결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담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북 전력지원을 위해 블라디보스톡과 청진을 연결하는 500kv 송전선을 건설하는 등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마. 북·EU 관계

2005년 북한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크게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북한은 EU를 대외개방의 우호적인 상대로 여겨 EU를 시장경제 방식의 습득과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했다. 둘째,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EU는 올 초부터 북한의 비핵화 준수 의무와 6자회담의 재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EU가 주도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난 수년간의 북한-EU의 밀월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EU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참여 중단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 결정을 재고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

했으며,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EU가 6자회담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6자회담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밝혔다(2.22). EU의 입장에서, 핵 이슈는 진지하게 대북 투자를 고려하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3월에 들어와 EU가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UNOG)에서 개막된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상정 방침을 밝히자, 북한은 인권결의안 상정 시도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럼에도 EU·일본이 주도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제로 공식 상정됐다(4.12). 제59차 회의에서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정도의 의제가 다루어졌고, 제60차 회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사항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2004년에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는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제기·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결의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국호를 지칭하는 것보다 ‘북한 정부’를 지칭하는 횟수가 거의 3배로(3회에서 8회로) 늘어나면서, 2003~2004년도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정부와 책임자들을 겨냥한 표현이 증대된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현 정부 및 지도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EU는 1998년 12월부터 북한과 양자 간 정치회담을 통해 인권문제를 연례적으로 토론해온 유일한 상대였으나, 북한인권

개선에 별 진전이 없자 결의안 제출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북한은 5월 들어 무역 및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평양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 무역 전문가를 초빙, ‘무역토론회’(무역 관련 포럼)를 개최하고, 뒤이어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를 열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EU 수교 4주년을 맞아 “지역의 통합과 독자성을 지향해”라는 기사를 통해 “EU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독단에 반대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15)고 하면서 EU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다.

EU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개선을 위한 300만 유로 지원계획을 승인했다(6.10). ECHO는 대북 지원금을 식량난의 여파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임산부들을 위해 9,900톤의 밀과 2,800톤의 콩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원조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ECHO의 대북 원조 총액은 모두 9,200만 유로로 늘어났으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제공한 지원액이 2,687만 달러로 한국(9,042만 달러)과 일본(4,659만 달러)에 이어 3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1997년 이후 8번째로 스위스에서 다자외교와 시장경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8월 말부터 약 6주간 제네바의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CASIN)에서 집단연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다자외교와 개발협력 시스템 구축 외에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무역과 통상외교, 경제개혁 과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과 EU간 경제협력은 매우 활발하였다. 평양에서 제2차 경제개혁 워크숍이 개최(10.11~14)되어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역할, 외국의 직접

투자 유치 및 국영기업·농업의 재구성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이행경제에서 정부의 각종 제도의 역할을 검토했으며, 중앙계획경제와 완전한 자유방임 체제 사이에서 정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 인센티브 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부의 각종 제도들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세션에서는 투자유치 방안, 특히 이행 경제체제의 외국투자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중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몇몇 전략들을 검토했다. 이 워크숍에는 공석웅 외무성 부상을 포함한 100명 가까운 경제관련 부처·기관의 관료들이 참석했으며, EU 대표단은 8개 EU 회원국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또 평양주재 EU 외교관들과 외국기업 및 원조기구 대표들도 참석했으며, 방북 기간에 EU 대표단은 새로 준공된 ‘3.16 전선공장’에 이어 개성공업단지지를 둘러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주한 유럽국가 대사관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개성공업지구를 시찰(11.2)했다.

올 하반기 북한과 EU 관계에는 인권 문제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EU 소속 25개 회원국들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마침내 유엔 총회에 제출(11.3)했다. EU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일본인 납치 등 외국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조사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있으나,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결의안

의 형태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되었다. 이에 북한은 EU가 대북인권결의안의 유엔 제출 이후, 북한 내에서 활동 중인 유럽 비정부기구(NGO)들에게 북한에서 떠날 것을 요구(11.16)했다. 북한의 퇴거 요구는 보건과 위생 증진 등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영국의 '세이프 더 칠드런'과 스웨덴의 'PMU 인터라이프', 프랑스의 '핸디캡 인터내셔널 앤드 프레미어 어전스' 등이 포함된 12개 유럽 NGO 중 11개 단체에 전달되었다.

EU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한국이 기권한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통과(11.17)되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찬성 84표 대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했다. 대북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였다. 결의는 또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를 완전하고 자유롭게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였다.

인권문제로 EU의 자금지원을 받는 국제기구들의 대북 원조사업이 올해 일부 차질을 빚었는데,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대북 지원사업 규모와 인력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2006년도 대북 원조사업 규모는 종전의 6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평양에 상주하는 인원도 종전 10명 선에서 3~4명 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IFRC나 세계보건기구 외에도 ECHO의 자금을 받고 있던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지원사업도 다소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1년까지 구소련과 동구권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왔으나, 이들과의 구상무역체제가 붕괴되면서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북한은 의약품 조달을 IFRC와 WHO, UNICEF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6년도 북한·EU 관계는 6자회담 틀 내에서 핵 문제 해결과 함께,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문제는 EU를 통한 대외개방 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오히려 북한인권상황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 EU측의 인권개선 압력이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EU간 경험도 시장경제학습을 위한 파견, 세미나 개최 정도의 관례적인 관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 조민 ·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대남동향

2005년은 남·북한이 사문화되어 가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 북한은 2005년을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폭넓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커다란 전진이 이뤄진 자랑스러운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 탈북자 집단 입국 등으로 2004년 7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의 개최(5.16)를 계기로 정상화되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 남북한 및 해외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6·15 공동위원회)를 결성(3.5)해 2005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을 결정한 후 전격적으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6월 평양서 열린 ‘6·15 민족대축전’과 ‘6·17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대화 중단이 길었던 만큼 ‘6·17 면담’과 뒤이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에서는 그 동안 밀린 남북한간 현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제15차~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제10차~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유무상통’ 방식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주장하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화하면서 적극적인 ‘대남공세’를 펼쳤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6·15와 8·15 남북공동행사를 성대하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평양서 열린 6·15 공동위원회 북측 위원 전체회의(5.5)가 열린 직후 당국대화가 재개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북·미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던 한반도 정세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설’, ‘유엔안보리 회부’ 등을 공론화하며 대북 정치공세와 경제압박을 강화하고 있었다. 더구나 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북·미간의 핵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한·미공조로 기우는 것을 막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6월 평양에서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당국과 민간이 함께 모인 대축전이었다. 또한 6·15 통일대축전의 성과를 이어받아 남·북한 및 해외 대표들이 서울에서 함께 한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8.14~17)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8·15 민족대축전은 분단 6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대표단과 남·북해외 민간대표단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함께 한 행사였다.

북한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해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역사상 처음으로 당국 간 광복절 공동 기념행사를 갖는 등 별도의 일정을 진행했다. 특히 개막식(8.14)에 앞서 북측 당국·민간 대표단 32명이 국립 현충원을 전격 방문, 참배한 것은 분단 60년을 마감하고 민족화해와 ‘실리적인 남북관계’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

준 ‘정치적 결단’이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의 국회방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 이해찬 총리주최 만찬 참가, 노무현 대통령 예방은 현충원 참배에 못지않은 과감한 행보로 평가되었다. 남북한이 7·4 공동성명 이후 상호 실체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당국과 민간 대표단이 직접 상대측의 입법기관을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5년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호협력관계 형성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보조축으로 사고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기본축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운 전면적인 민족대단결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기조는 200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일정한 우여곡절을 예상하면서도 돌발변수만 없다면 2005년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일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형식보다 내용을 강조하면서 남북한간 ‘근본문제’ 해결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올해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2006년 남북관계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12.13~16)에서 “체제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군사적·경제적 3대 장벽’ 해소를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우선 ‘정치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혁명열사릉’ 등에 대한 남측주민들의 자유로운 참관 허용을 요구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시대적 법률, 즉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또 ‘군사적 장벽’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경제적 장벽’인 바세나르 협약과 EAR(수출통제규정)에 남측이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3대 장벽’ 해소가 실질적인 ‘제2의 6·15시대’로 나아가는 첫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으나, 남남갈등이 존재하고 제도적 걸림돌이 산재한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남측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남북군사회담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은 민간통일운동 차원에서 6·15 공동위원회를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바꾸고 ‘규약’을 제정한 성과를 토대로 동 위원회의 조직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장벽’ 해소를 민간통일운동에서 제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당국간 대화를 깨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협력 및 통일운동과 보조를 맞춰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현준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III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장관급 회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6.21~24)은 2004년 7월초, 한국의 김일성주석 10주기 조문 불허 방침에 이은 탈북자 집단입국, 미국의회의 북한인권법 채택 등을 계기로 북한이 예정되어 있던 회담(2004.8.3~6)을 무산시킴으로써 1년 이상 중단되어 있다가 재개되었다.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제조·보유를 공식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촉구하였고, 5월 13일 북측 경비정의 두 차례 NLL 침범이 있는 뒤, 5월 14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을 통해 당국회담(차관급, 개성, 5.16~17)에 동의해 왔고, 이에 5.16~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차관급회담에서 제15차 장관급회담의 일자와 장소가 합의되었고, 봄철 비료 20만 톤 제공과 더불어 ‘중요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6월 17일 대통령특사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단독면담(2시간 30분)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송전선로 공사에 즉각 착수해서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송전한다는 중대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제1차 전체회의(6.22)에서 한국은 6·17 면담 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으로서 관찰해야 함과 6자회담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7월 중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최종

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기의 핵무기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차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제15차 회담은 전체회의와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 그리고 북측대표단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6.23)을 통해 6·17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2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제15차 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제2의 6·15시대’라 할만큼 각종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텃다. 북핵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서 남북대화가 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제3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본격 협의를 재개하고, 제10차 경추위회담을 통해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경험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복 60주년행사 공동개최를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남북회담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6·17 면담 시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을 표명한 바, 전체회의 회담테이블을 원탁으로 교체함으로써 원만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회담을 실질협의 중심으로 진행시켜나가기로 지침을 정하고, 회담결과 발표방식을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고, 실력·실리·실적(3실)을 쌓아가는 대화를 추구하기로, 동시에 호혜주의와 실천을 중시하기로 하였다.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9.13~16)은 장소만 원래 합의한 백두산에서 평양으로 바뀐 채 제15차 회담에서의 합의일정대로 개최되었다. 회담 기간 중 정동영 수석대표는 북측 핵심관계자를 별도 면담(9.14), 남북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미·일측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9.14)에서 한국은 군사당국간 회담 재개, 남북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

및 주소 확인, 경제인력 공동 양성, 거래말사전 편찬 당국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주장하였다. 이후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담 의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15일 오후부터 회담의제 협의를 사실상 시작해서, 회담 마지막 날인 16일 새벽까지 공동보도문 조율작업을 벌이는 등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는 같은 시기에 개최된 베이징 제2단계 4차 6자회담의 진전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수차례의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보도문 발표후, 제1항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16일과 17일 북측언론은 1항에 명시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라는 문구를 삭제 보도하였고, 19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체면주의는 상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면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절대화하는 것’이라며, 체면주의를 버리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사실을 남측 언론이 지적하고 나서자, 17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라는 문구는 끝내 포함하지 않았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 12.13~16)은 제16차 회담에서의 합의일 정대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중 남북한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제반현안과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남북경협과 체육·역사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이룬 점,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상봉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한 점 등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측은 9·19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가능성 언명으로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에 공동성명 이행과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조속 개최 등을 적극적인 설득노력으로 경주하였고, 그 결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 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의 선순환구조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민족내부 사업이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 등의 추진에 합의한 것 등이 지속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성급회담 개최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점과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상대측 지역의 방문지 제한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8·15 공동행사시 북측 대표의 국립현충원 방문을 이유로 남측 방북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 문제는 공동보도문 제1항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적 문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2005년 남북장관급회담은 중단된 지, 11개월만인 5월에 차관급회담으로 복원되기 시작해서, 6·17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위원장의 면담, 15~17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제2의 6·15시대'로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다방면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제15차 회담에서 합의한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과 서해 공동어로, 철도·도로 시험운행, 임진강 수재방지 등과 관련한 군사실무회담을 예정대로 진행시키지 못한 점은 2006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2006년에는 남북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진전과 더불어 군사분야에서의

성과도출과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논의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 과 남북 정치관계발전 등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남북장관급회담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폐문제와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더욱 강경해지는 상황이고, 북한의 대남정책 또한 전통적인 통일전선사업이 다시 강화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대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을 17차까지 이어오면서, 점차 정례화·제도화하는 추세이므로 2006년에도 분기별 1회의 남북장관급회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허문영 · 북한연구실장

나. 경제분야 회담

2005년 남북한 간 경제분야회담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7월에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제1차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회의 및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8월에는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의,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9월말에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는 10월 28일 개성공단내에 새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7.9~12)에서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와 위원장 접촉 3회 등을 통해 12개항을 타결하였다.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은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이를 위한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9월 중, 개성공단에 남북경제협력

협회사무소 개설 및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의 기반시설 조속 건설 및 15개 시범공장 건설의 연내 마무리,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제1차 회의 7.25~27, 개성에서 진행) 구성 및 공동어로·양식·수산물가공 등 어업 협력 문제들의 협의 해결, 경의선·동해선 철도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개통식 거행(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회의를 7.28~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를 계기로 실현(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8~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단독조사 자료의 조속한 상호교환 및 8월 하순경에 공동조사 진행,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9개 합의서의 8월 초까지 발효, 쌍방 경제시찰단의 11월중 상호 교환,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9.28~10.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 등이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회의(7.25~27, 개성),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회의(7.28~30, 개성),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8.8~10, 문산),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8.24~27, 평양)를 개최하였다.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는 서해상 일정수역에서의 공동어로 진행, 공동어로수역 내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한 출입통제조치에 상호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수산분야 기술교류 진행, 제3국 어장진출에 상호 협력,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의 조속 완료 및 역사 건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들의 대북 제공,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경의선 8.18~20, 동해선 8.23~25),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10월 하순경 동시 개최,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위원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문서로 교환, 철도연결공사 진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는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총 6개항의 공동보도문이 채택되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가 타결되었다.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월 15일부터 개시, 자기측(북측) 항구 간을 직접 항해하는 도중에 상대측(남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월 15일부터 허용, 남북해상당국간 유선통신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월 11일 연결하며 8월 12일부터 운용,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연내 보장을 위해 노력,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8월 14일까지 교환,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 회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남북해상당국간 유선통신망의 연결은 8월 12일 오전에 완료하였다.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의(8.18~20, 개성)에서 남과 북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측 일정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협력사업 진행(남측은 영농자재 및 기술지원, 북측은 남측 전문가·기술자의 방문 보장),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전,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시 각 사업에 대한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 회의(9.29~30, 개성)에서 해운항만 관계자의 교환방문 등 남북간 해운항만 분야의 교류협력을 보다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상호관심사들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남북 해상당국 간 유선통신망 운영합의서는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마무리하여 채택하기로 하였다.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10.28, 개성공단)는 개성공단내에 새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10차 남북경추위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과 이미 여러 차례 합의한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쌍방소장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명(11.10, 개성공단내 경협사무소)하였다. 당국 간 경협 추진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11.23~2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남북한 간 경제회담 및 관련 실무협의회, 실무접촉 등은 개성

공단에 개설된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활용하여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1차 경추위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2차 경추위를 통해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운용 관련 및 개성공단 1단계 본공단의 내외부기반시설을 위한 각종 실무 접촉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밖에도 농업, 수산업 등 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실무접촉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원활한 진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제회담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최수영 ·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군사회담

2005년 남북한은 2004년 개최되었던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4.6.3~4)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두 차례(제3차 및 제4차) 개최하였다. 7월 20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3차 실무대표회담은 원래 우리 측이 2004년 7월 19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서 그 동안 북측이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중단된 상태였던 군사회담이 재개된 의미를 가졌다.

회의의 주요의제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와 그 「부속합의서」(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에서 합의, 2004.6.12)에 입각한 선전

수단 제거, 서해통신 연락소 설치,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충돌 방지 조치,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2005.6.21~2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시 남북한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의 백두산 개최합의) 등이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에 걸쳐 제거하기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하였던 남북한은 2004년 6월 29~30일 파주(홍원연 수원)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1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목록대비 제거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였고,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선전수단의 제거 및 종교시설 관련 조치의 결과를 확인하고, 마지막 3단계 조치로서 선전수단을 7월 25일 개시하여 8월 13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004년 합의된 「부속합의서」가 약 1년의 지연 끝에 마침내 실행된다는 의미를 가졌다.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서해통신 연락소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신선을 2005년 8월 10일 오전 9시에 연결하고 10시에 시험통화를 실시하며, 8월 13일부터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서 원래 2004년 8월에 예정되었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일일 2회(09시, 16시)의 정기적 통신이 1년 늦게 시작되게 되었다. 한편 우리 측은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보충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외 우리 측은 철도·도로 완공에 따른 군사보장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군사실무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북측은 추후 논의하지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8월 1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 남북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방을 향한 선전수단의 제거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선전활동을 중단하고 선전수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기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북측은 이 회의에서 우리측 종교단체(기독교탈북연합)에 의한 전단 살포행위가 「6·15남북공동선언」 및 「6·4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주장하고 우리 측에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동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기관에서 조사하여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개최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우리측의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문제삼아 그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였다.

향후 남북한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의제는 남북 간 철도·도로의 개통과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의 개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재개 등이다.

남북한은 제5차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7.28~30, 개성)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10월 하순경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개통식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2006년에는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이해관계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북한이 철도·도로 통행합의서와 그 군사적 보장합의서의 체결에는 유연하게 대응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도로의 개통, 시험운행, 그리고 향후 운행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남북한이 합의할 경우, 「잠정합의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전협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백두산지역의 도로가 부실하다는 등 준비의 미비를 이유로, 그리고 한·미간에 실시된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이유로 구체적인 회담일정의 확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남·북 장성급회담의 개최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접견(6.17)시 확인된 사항이고,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회담의 조속한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회담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쌍방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군사정보 교환,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참관, DMZ 평화적 이용)의 의제화가, 서해 우발충돌 방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무선 교신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자료·정보의 교환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보충합의서」의 체결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의 설정 및 이용 시기, 남북 장성급회담의 정례적인 개최와 국방장관회담의 재개 등이 의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손기웅 ·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05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교역부문과 협력사업부문 모두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남·북교역은 활발한 상업적 거래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대북지원확대에 힘입어 대폭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확대는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 물자 및 생산품의 반출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1~10월 중 개성공단 반출입액은 1억4,209만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나타났다. 이중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반입액은 1,110만 달러였다.

경제협력사업에서는 당국 간 협력사업인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에서 성과가 있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진출업체는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반입하고 있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는 시범운영 후, 연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9월부터 70여일간 관광객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운영되는 파행을 겪었으나 11월 18일부터 정상화되었다. (주)안동대마방직과 북측 새별총회사의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는 10월 1일 창업식을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안동대마방직은 삼베제품사업을 위한 설비를 북한으로 2차례 반출하였다.

정부는 1월부터 10월까지에 경제협력사업자로 11건, 경제협력사업으로 11건을 승인하였다. 승인을 받은 업체에는 한국전력공사, (주)KT, 알티즌하이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95건이며 이중 64건에 대해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있어서도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민간차

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소재자산의 정규담보 인정,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9개 경협합의서는 8월 5일 남과 북이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개성공단에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소(10.28)하였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11.10)되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11.21)하였다.

1~10월 중 남북교역액은 총 8억7,565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4,807만 달러 대비 59.7% 증가하였다. 이중 반출액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협사업 관련 물자 반출 및 민간차원 대북 지원의 대폭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9.4% 증가한 6억1,13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한 2억6,434만 달러로 나타났다. 아연괴, 조개, 모래 및 농림수산물의 반입이 증가하였고, 활발한 대북 위탁 가공에 따른 의류 반입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개성공단 생산품의 신규 반입이 이루어졌다.

남북교역 중 상업적 거래는 5억6,355만 달러(1~10월)로 전년 동기 대비 65.0% 증가하였다. 이중 반출은 2억9,948만 달러로 123.4%가 늘어났고, 반입은 2억6,407만 달러로 27.3% 늘어났다.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건설 중장비와 기계류 및 현지 공단 가동에 따른 원자재 등의 반출이 대폭 증가하였고, 금강산관광지역에서 사용할 요업제품, 비누, 화장품 등 반출 증가 및 관광시설확대를 위한 건설자재의 반출이 증가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3억1,2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0% 증가하였으며 이중 대북지원은 3억1,123만 달러로 52.1% 증가하였다. 민간차원의 대

북 지원은 비료지원의 큰 폭 증가에 따라 2억1,960만 달러로 68.8% 증가한 반면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9,163만 달러로 29.3% 증가에 그쳤다.

<표> 1~10월 중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동향

(단위: 천달러, %)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2005년 1~10월			
			반출	반입	합계	
상업적 거래	교역	일반교역	18,083 (17.3)	146,959 (21.3)	165,042 (20.9)	
		위탁가공교역	66,609 (13.6)	105,934 (22.8)	172,543 (19.1)	
		소계	84,692 (14.4)	252,893 (22.0)	337,585 (20.0)	
	경제 협력사	개성공단사업	130,986 (533.8)	11,100 (-)	142,086 (587.3)	
		금강산관광사업	77,883 (131.1)	50 (-)	77,933 (131.2)	
		기타경제 협력사업	5,917 (4.3)	31 (82.3)	5,948 (4.5)	
		소계	214,786 (257.7)	11,180 (-)	225,966 (276.2)	
	합계		299,478 (123.4)	264,073 (27.3)	563,551 (65.0)	
	비상업적 거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219,557 (68.8)	42 (-)	219,599 (68.8)
			정부지원	91,614 (29.3)	19 (-)	91,633 (29.3)
소계			311,172 (52.0)	60 (-)	311,232 (52.1)	
사회문화 협력사업		279 (△83.0)	204 (-)	483 (△70.6)		
경수로 사업		381 (△14.9)	0 (-)	381 (△14.9)		
합계		311,831 (50.8)	265 (-)	312,096 (51.0)		
총계		611,309 (79.4)	264,338 (27.5)	875,647 (59.7)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품목군별 1~10월 거래동향에서 반출을 살펴보면 화학공업제품(비료 포함)이 31.6%, 기계류가 16.9%, 농림수산물 16.3%, 섬유류가 12.3%를 차지하였고, 반입의 경우에는 섬유류가 36.4%, 농림수산물 33.2%, 철강금속제품이 14.0%를 차지하였다.

남북교역의 1~10월 중 거래유형별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일반교역에서 반출 상위 5대 품목은 변압기 부품, 동체권선용 전선, 기타 선박, 철도 차량, 발전기 부품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5대 품목이 반출액의 34.7%를 차지하였다. 일반교역의 반입에서는 아연괴, 조개, 비금속광물(모래), 건조수산물, 기타 연체동물(백합, 전복, 소라, 피조개 등, 오징어, 문어, 낙지류 제외), 수산가공품, 표고버섯, 고사리, 문어, 버섯류(표고버섯 제외) 등 상위 10대 반입품목이 반입액의 85.4%를 차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의 반입 10대 품목(운동복, 남성바지, 신사복상의, 코트 및 자켓, 여성바지·스커트, CRT TV, 남성셔츠, 내의실내복, 여성양복상의, 언더셔츠)이 차지하는 비중은 81.9%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전체 반출금액 중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주요 반출품목은 공단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 및 건설 중장비와 입주업체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산업기계류 등이다.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물품 중 상위 10대 품목(비료, 언더셔츠, 특장차, 의약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83.7%였고,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물품 중 상위 5대품목(쌀, 포트랜드시멘트, 경유, 알루미늄관,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5%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사업은 시범단지의 가동 및 1단계 100만평 본단지 부지조성 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1월 26일, 2개 기업(재영솔루텍, 제씨콤)에 대한 사업승인으로 시범단지 15개 기업이 모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11월 현재, 시범단지 내 리빙아트(주방용품), 신원(의류), SJ테크

(유압패킹), 삼덕통상(신발), 대화연료펌프(자동차부품), 부천공업(전선), 문창기업(의류), 로만손(시계) 등 11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시범단지 내 구조물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는 99% 이상 진행되었고,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이 완공(4.28)되었다. 시범단지에 필요한 전력,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의 공급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배전 방식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15,000KW가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본단지(1단계 100만평)의 내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내 공단에 준해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폐수처리장(3만톤/일), 폐기물처리장(1.5만평), 정수·배수장(6만톤/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완료 계획인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본단지 개발의 부지 조성작업은 9월 8일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및 폐수처리장이 착공되었고, 용수 및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완료 단계로 조만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9월 12일, 우선 분양 대상인 5만평에 대한 입주업체가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일반공장 용지 입주업체로 섬유·의류·봉제 11개 업체, 가죽·가방·신발 5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협동화단지 2개 컨소시엄(7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산업단지공단)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인원·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국방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를 개정(1.1)하였다. 이를 통해 방북승인 처리기간 단축(10→5일), 수시방문자의 경우, 방북신고 폐지, 방북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 이루어졌다. 특례 개정을 통해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도 11종에서 최소 2종으로 축소되었다. 입주업체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3.23), 군과 CIQ의 이중검색을 CIQ 검색으로

일원화,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통일부-관세청 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시스템 시행(7.1) 등도 이루어졌다.

8월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출로 불거진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제한조치로 9월부터 금강산관광은 하루 600명으로 축소 운영되었다. 금강산관광은 파행운영 70여일만인 11월 18일부터 다시 정상화 수준에 들어섰다. 1~10월 중 금강산관광객은 274,942명이었고, 10월말 현재 누적관광객수는 1,131,939명이었다.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금강산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가족호텔, 방갈로, 불교도숙소 등 숙박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자가용관광 실시와 골프장, 가족호텔 등 관광시설 건설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특구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금강산 특구 개발을 가속화해 나갔다. 정부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 포장공사를 지원하고,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생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하였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는 2004년 11월 말, 완료되어 인원·물자·차량의 왕래가 이루어졌다. 철도의 경우, 남북은 제9차 경추위(2004.6.5) 및 제10차 경추위(2005.7.12)에서 2005년 개통에 합의하였으나 지켜지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경의선 구간 공사를 완료했고, 동해선은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를 완료하고 통전터널-저진역 구간(3.2km) 공사를 진행하였다.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및 역사 공사 등 잔여공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남북철도·도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였다.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간에 철도운영공동위원회·도로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간 열차운행사무소·차량운행사무소 등의 개소를 추진하였다. 철도 및 도로운영공동위원회 구성 후에는 남북간 열차·차량운행의 세부적 사항 규정을 위한 부속서 논의도 병행하였다.

2006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적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북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업적 거래도 최소한 2005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소폭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3대 경협사업 중 하나인 개성공단사업은 시범단지 진출기업의 정상적인 가동과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우선 분양된 5만 평에 대한 선정기업의 공장 건설이 추진될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완전하게 연결되어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투자사업은 큰 폭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은 여전히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간 사업에 있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와 함께 미국과의 공조를 동시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만을 추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 최수영 ·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분야

2005년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양과 질에 있어서 2004년에 비해 발전된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4년 하반기 북핵문제의 교착상태에서 김일성주석 10주기(7.8) 조문 불허, 탈북자 집단입국(7.27~28), 북한인권법 미 하원통과(7.21) 등으로 민간교류가 전반적으로 소강국면에 진입했으나, 2005년 중반을 계기로 2004년 하반기 발생한 남북대화경색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사회문화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교류·협력사업들이 성사되었다. 2005년 북한은 비군사분야의 남북대화 및 교류를 일정수준 유지함으로써 남한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북관대첩비반환, 안중근의사유해공동조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8.15공동행사 등 상징성이 큰 민족사업들이 사회문화분야에서 성사되었다.

11월말 현재 사회문화교류협력목적의 방북 인원은 10,227명으로 지난 5년간(2000~2004년) 방북인원이 13,519이라는 점에 비추어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46건으로 지난 5년간의 누계인 47건과 같은 수준이고, 방송, IT, 출판 등 분야가 다변화되어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의 질적인 발전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평양의 문화유적 답사와 아리랑공연 참관을 위해 약 7천명의 남측 주민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평양을 방문(9.26~10월 말)하는 등 민간단체의 대규모 평양방문에 따라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저변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6.15, 8.15 민족 공동행사는 남북의 당국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

으로 개최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었다. 6.15 평양행사에는 여야 주요 4개 정당이 참여했으며, 6.17 면담이 성사 되는 등 의미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광복 60돌을 기념하기 위한 8.15민족대축전에 민간분야의 남·북·해외대표와 남북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행사기간중 북한측의 국립현충원 참배가 이루어졌다.

광복60주년을 맞아 사회문화분야에서 상징성이 강한 민족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의 협력구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안중근의사유해발굴과 북관대첩비반환사업에 있어 남북공조가 이루어졌으며, 겨례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에 대한 공동지원도 합의가 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축구대회」(7.26~8.8, 대전·대구·전주),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9.1~4, 인천)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평양-남포간 마라톤대회」(11.23~26)도 개최되었다. 특히 남북한이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합의(중합대회 최초 단일팀 구성),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이후 유지된 체육분야 국제경기대회 남북협력 모멘텀을 유지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평양에서 남측 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 호태왕」과 가극 「금강」이 공연되었고, 남북 문인간의 민족작가대회가 평양과 백두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 남북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협의를 진행 되는 등 의미 있는 교류가 성사(12.7)되었다. 대중문화분야의 경우 조용필 평양공연(8.23)이 성사되었다.

방송분야에서는 남북방송인토론이 성사(9.4~6)되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과 드라마와 CF분야까지 협력이 다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북한이 제작한 사극 드라마 「사육신」이 남한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종교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가 추진되었으며, 특히 금강산 신계사·영통사 복원 사업과 평양제일교회 신축 및 봉수교회 개관 사업이 추진(11.15)되었다.

2006년도에도 남북관계개선에 일정정도 응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기존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사회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2005년에서처럼 민족적 상징성이 높은 교류협력사업들이 다수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등 기 합의된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고,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등을 통해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대북마살플랜’을 통해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의 현충원참배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파격적 이벤트를 통해 남한여론을 환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민간요원이 상주하는 대북지원프로그램들을 거부하고 있는 바, 아리랑공연 등 실리추구차원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형태의 사업은 성사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한범 ·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인도주의 사안

가. 대북지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실시한 이후 1995년 현재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 해소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지원의 장기화로 인해 지원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보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2년 10월 이후, 북핵문제로 인한 지원환경의 변화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북지원 확대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북한의 태도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4년 8월 북한이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을 통한 통합지원호소(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통합지원호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협력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05년 통합지원호소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당국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호소 거부로 인해 북한 내 상주기구들은 주간별 기구 간 회의, 월간별 부문회의(농업, 보건과 영양, 수질과 환경위생, 식량안보) 등 조정회의를 통해 대북지원의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평화와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활동, 인도주의 지원과 안보문제, 인도주의지원과 인권문제, 인도적 지원의 환경 변화와 개발협력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월부터 평양을 비롯한 전역에서 식량공급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곡물 판매도 사라졌다고 보도(10.27)하였다. 김성철 수매양정성 처장은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식량공급의 정상화란 그동안 식량사정으로 기준량보다 적게 주던 것을 전량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호전에 따라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WFP 및 UNOCHA 평양사무소장과의 면담에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개발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8.26)하였다. 나아가 개발지원을 명분으로 WFP를 비롯한 평양 주재 유엔기구와 국제 NGO사무소 대표들에게 금년 말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동시에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미 WFP는 북한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식품가공공장 19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현식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이탈리아 로마 WFP본부를 방문(10.26~27)해 WFP의 북한 내 활동 감축문제를 협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모리스 WFP 사무총장은 북한당국과 대북지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10.13~15)하였다. 국제사회는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WFP를 비롯한 유엔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인도적 지원이 공평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11.17)하고 있다.

대북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월 30일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 2억 2,852만 달러(정부 1억 5,105만 달러, 민간 차원 7,74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4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최초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상회(총 2억 5,620만 달러, 정부 1억 1,512만 달러, 민

간 1억 4,108만 달러)하였던 것과 달리 2005년도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민간차원보다 상회하고 있다. 국내의 대북지원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반구호(10,538→3,747만 달러)분야와 보건의료(5,632→2,777만 달러)분야는 대폭 감소하고 농업복구분야(9,450→16,328만 달러)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단위 : 만 달러, 괄호안은 백분율)

구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일반 구호	23,225 (100)	455 (99)	4,329 (92)	2,891 (91)	565 (12)	1,434 (13)	6,067 (45)	4,174 (31)	6,157 (39)	10,538 (41)	3,747 (16)	63,582 (46)
농업 복구		5 (1)	205 (4)	254 (8)	3,941 (84)	8,562 (75)	5,476 (40)	7,351 (54)	7,673 (49)	9,450 (37)	16,328 (72)	59,245 (43)
보건 의료			189 (4)	40 (1)	182 (4)	1,380 (12)	1,996 (15)	1,967 (15)	1,933 (12)	5,632 (22)	2,777 (12)	16,096 (11)
계	23,225 (100)	460 (100)	4,723 (100)	3,185 (100)	4,688 (100)	11,376 (100)	13,539 (100)	13,492 (100)	15,763 (100)	25,620 (100)	22,852 (100)	138,923 (100)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2005년 11월 30일 현재)

정부는 대북 비료지원 일환으로 비료 35만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WHO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약품 및 장비(81만 달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123만 달러), 응급구호세트(21만 달러), UNICEF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사업(100만 달러)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북 식량차관 방식으로 북한에 50만 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특히 민간, 정부, 국제기구간 역할분담 하에 영양개선, 질병 관리, 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영유아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8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WHO, UNICEF 등 국제기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9.10 제정)

에 근거하여 북측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7개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113억 68백 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승인하였다. 10월 31일 현재 12개 단체에 42억 56백 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분야 및 장기적 복구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축산사료 지급 시범사업,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모자보건·복지 시범사업, 농업·보건용수 개발 시범사업 등 5개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17개 민간단체들이 농업용 비닐(6,000만 m^2)을 북측 수요에 맞추어 신속히 지원하였다.

2006년에도 북한 핵문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약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NGO의 경우, 대북지원 금액 중 95%이상을 유럽연합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조건은 상주사무소 설치 및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이기 때문에, 북한의 철수 요구로 인해 유럽연합의 지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이 식량배급의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상황의 편차가 예상된다. 특히 국제기구의 배급이 중단되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영유아 사업, 민관 합동 사업, 공모 형태의 사업방식 등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긴급구호를 개발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발지원의 방식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 김수암 ·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나. 이산가족문제

2005년 남북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면회소 착공식, 두 차례의 금강산 순차상봉사업과 세 차례의 화상상봉사업,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등의 성과가 있었다.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8.23~25)에서는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화상상봉 지속·확대 문제, 이산가족 교류 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절박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화상상봉,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사업의 지속 실시와 정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면회소 착공식(금강산, 8.31)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비롯하여 남과 북의 이산가족 550명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온정리 조포마을 앞 면회소 부지에서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착공한 면회소는 부지 1만 5천평(50,000m²)에 건평 6천평(19,835m²),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로 동시에 1천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이다. 오는 200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한 면회소 착공은 상봉,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제10차 상봉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된 제1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8.26~31)는 금강산에서 순차상봉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행사(8.26~28)에서는 남측 가족 98명과 동반가족 47명이 북측 가족 229명을 만났으며, 2차 행사(8.29~31)에서는 남측 가족 434명이 북측 가족 100명

을 만났다. 특히 이번 상봉행사는 최초의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8.15)에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남북화해의 정도를 실감케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11.5~10)도 금강산 지역에서 순차상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행사(11.5~7)에서는 북측 가족 100명이 남측 가족 441명을 만났으며, 2차행사(11.8~10)에서는 남측 가족 99명과 동반가족 44명이 북측 가족 219명을 만났다. 이와 같이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성사됨으로써 2000년 이래 매년 2~3차례씩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횟수를 더함에 따라 보다 더 내실 있는 상봉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연히 드러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12월 8일 진행된 상봉행사장에서 북한의 행사 지원요원들이 남측 방송사의 현지 위성송출을 제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북측은 남북자 가족상봉 관련 보도에서 “남북”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문제 삼아 SBS 취재기자의 방송화면 송출을 제지하였으며, 이어 9일에도 SBS 취재기자의 현지취재를 제한하였다.

남북의 특정장소에 각각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광통신망 등으로 연결해 남북의 이산가족이 영상과 음성으로 상봉하는 방식인 화상상봉이 8월 15일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시범상봉)에서는 남북 각기 20가족씩 총 40가족이 만났다. 남과 북의 40가족은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한적지사(부산·수원·대전·인천·대구·광주 등)에 마련된 상봉장과 북측 평양의 상봉장을 화면으로 연결하여 차례로 상봉하였다. 제1차 상봉에서 남측은 상봉자 20명과 동반가족 57명이 재북가족 50명과 만났으며, 북측에서는 상봉자 20명이 재남

가족 79명과 상봉하여 총 226명이 화상을 통하여 가족·친척과 만났다.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11.24~25)에서는 남측 40가족 347명과 북측 39가족 214명 등이 화상으로 만났다. 남측은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방 8개 도시(인천·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춘천·제주)의 한적지사에 마련된 13개 상봉실에서, 북측은 모두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10개 상봉실에서 가족당 약 2시간 정도씩 화상으로 가족·친척을 만났다.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12.8~9)에서는 제2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남북 각기 40가족씩 총 80가족 585명이 화상을 통해 가족·친척과 상봉하였다. 한편 제2차 상봉부터는 이산1세대의 고통에 따른 이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에 상봉장을 추가 설치, 운영한 것을 비롯해 상봉참가 가족수 확대(남북 각기 가족당 2~5명 참가), 남북간 전용망을 통한 가족사진 교환에 의한 상봉 전 가족관계 확인절차 강화 등으로 상봉의 내실을 기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방식인 화상상봉은 이산가족 교류(상봉·생사확인)규모의 확대와 함께, 특히 거동이 불편해 대면 상봉이 어려운 고통의 이산가족들에게 화상으로나마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상봉 때부터 현저하게 많아진 북측가족의 김정일 위원장 찬양발언으로 가족상봉의 의의가 퇴색하기도 하였던 바, 이는 공개적인 만남에 따른 북측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은 4월부터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몇 편은 이미 시범 제작되었다. 영상편지 제작은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고통의 이산 1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떨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북측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편지는 앞으로 북측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분단의 역사적 기록으로도 보관될 예정이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12.13~16)에서 합의된 바, 2006년 초에 화상 상봉(2월), 금강산 순차상봉(3월), 적십자회담(2월)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상봉과 금강산 순차상봉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거의 정례화되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화상상봉은 월 1회로 정례화 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우리측은 지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정례화(월 1회)를 제안한바 있고, 북측도 화상상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례화 추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해에는 전시행불자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사·주소확인 시범사업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후 남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규모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7년 4월 면회소 준공을 앞두고 면회소 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남북한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따른 상봉인원의 규모 확대와 상시 상봉의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남북한 간에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순희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2005년에는 2004년 미 의회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우려되던 북한 이탈주민의 체류환경에 대한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입국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1월 말 현재 1,217명으로 2004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7,521명으로 사망 및 이민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자는 7,226명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48명으로 3자리수를 기록한 이후,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 2004년 1,894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지난 7년 동안의 증가추세가 중단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등 현지국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국내 입국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5년에도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속되었다.

중국 등 북한이탈주민 체류국 외교공관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한 기획입국 시도는 지속되었으나, 2004년에 비해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상반기에는 단속강화로 인해 기획입국 시도가 급감하였으나, 6월 7일 베트남 주재 태국대사관 7명 진입, 6월 28일 칭다오 한국인학교 3명 진입, 7월 27일 텐진 일본학교 5명 진입, 8월 29일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7명 진입, 10월 11일과 27일 칭다오 한국국제학교 각 각 8명, 13명 진입 등의 기획입국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중 텐진 일본학교 진입 4명과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진입 7명이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중국당국이 외교공관 및 국제학교 진입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입국에

협력하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엔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송환은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되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조치에 대한 개선 촉구는 국내외적으로 지속되었다.

상반기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하나원 재증축이 이루어지면서, 단신입국 여성들을 별도로 수용하던 하나원 분원을 본원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왔다. 즉 기존의 ‘보호위주’의 지원정책 대신 자립·자활 노력 및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삭감하는 대신 장기직업훈련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장기취업 장려금 등 자립장려금지급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고용지원금 수혜비율이 67%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대구시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조례를 통과(11.10)시켰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서 포함되어 왔으며, 특히 인신매매와 강제단속 및 송환이후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미국무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m)’을 발표(2.26)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탈북자 규모가 감소하여 현재 중국 내 탈북자가 3만~5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좋은 벗들」도 6월~7월 중국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미 국무부의 추정치와 동일한 규모의 탈북자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

화,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및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의 탈북자 지원관련 예산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 등 탈북자 체류국의 미 공관들이 공관보안 및 탈북자 신변위협 등을 근거로 현지에서 탈북자에 대한 미 정부자금의 직접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을 위한 ‘적절한 미국 망명 절차’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민국적법’에 따라 ‘프라이어리티 3’인 가족재회의 대상국으로 북한과 미얀마가 추가되었다. 이제까지 미국의 난민수용절차에 따라 미국에 정착한 북한주민은 없으며, 망명절차를 거친 경우는 9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탈북자강제송환 저지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보호 위반시 수입동결 및 감축 등 무역제재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나 법제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사회불안, 북·중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응하였다. 북한주민의 탈북 및 국내입국관련 활동을 하다가 중국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국인의 수가 21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출신 국내입국자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4년 형법개정을 통해 단순탈북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전과 달리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조치 및 탈북증개인에 대한 공개처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단체들에 의

해 탈북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은 동영상자료가 공개되기도 하였으며, 실제 촬영자로 알려진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귀국자, 일본인 처 및 그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일본에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이들을 수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90명 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도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요 관심사인 인신매매 등 탈북자들의 중국 내 인권침해 및 송환이후, 가혹한 처벌에 대한 자료 및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문제가 국내외의 관심사로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북한인권법에 따른 본격적인 탈북자 보호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및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이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체제 이완을 우려한 북한당국이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규 탈북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및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의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비율에 이르며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개인 및 관련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내입국 규모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동남아 국가를 통한 입국시도도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입국통로가 통제될 경우 현지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2005년 11월 유엔법률 및 난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평양에서 난민,

무국적자 보호, 망명문제 및 비송환원칙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향후 북한이탈주민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관련기관 및 국가들과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탈북자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라. 인권문제

2005년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공식화되었고,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 및 우려는 지속되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압력이 강화되었다.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3.14~4.22)에서는 3년 연속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04년에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임명된 윌트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와 제60차 유엔총회(8.29)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둘째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는 점, 셋째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등 자유로운 조사 활동을 위한 문호개방을 요구한다는 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보고는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개선 촉구결의안을 채택(12.16)하는 데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일부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동법 301조에 따라 국무부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보고서를 제출(2.26)하였고, 제이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8.19)하였다.

또한 미국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미 국무부의 지원으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였다. 1차 대회는 워싱턴에서 개최(7.19)되었는데,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정권의 부도덕성 부각, 자유의 확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2차 북한인권국제대회(12.8~10)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는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이 대회는 국내외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북핵 회담과 관련해 인권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6자회담과 인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문제와 인권 개선 압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을 ‘범죄국가’로 지칭(12.7)하면서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등 인권문제와 6자회담을 분리·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북한당국은 유엔법률가(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법률가)들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유엔의 각종 협약과 난민, 국적상실자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교육 및 기술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06년 3월 벨기에에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주관의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 5월 노르웨이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주관의 제7회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U의 발언권이 UN과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중지를 요구하고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에 전세계적인 <북한인권 국제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한 ‘서울선언’(12.9)을 채택한 것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전복 기도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요 현안인 6자회담의 공전 가능성과 북·미 관계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은 유엔의 결의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와 체제 및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인 문호개방 등 인권정책에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양자 및 다자간 틀을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최의철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부록: 2005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관계 일지

- 01.01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 개정
 02.20 겨례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개최(금강산) 및 공동보도문 채택
 03.03~03.05 6·15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 결성 및 제1차회의 진행
 03.23 개성공단 입주업체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
 04.07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04.18 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함정의 영해침범 주장
 04.22 북측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 실무접촉
 04.26~04.28 6·15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접촉(금강산)
 05.05 6·15 공동위원회 북측위원 전체회의 개최(평양)
 05.11 인민군 해군사령부, '남한 함정 5월 들어 매일 침범' 왜곡 주장
 05.15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북한내 각지 사찰),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들의 공동발원문 봉독
 05.16~05.19 남북차관급 회담개최
 05.23~05.24 6·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및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대학생 상봉모임(금강산)
 05.24~05.28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실무협의
 05.28~05.31 제4회 대북협력국제 NGO회의 개최(베이징)
 06.13~06.17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남북 당국 대표단 및 남·북·해외 민간대표단 참석, 정동영장관 대북송전 중대제안 제시, 평양)
 06.19 특사방문
 06.21~06.23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06.29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기술자 실무접촉(개성)
 07.06~07.09 남북대학생 금강산 상봉모임(2차)
 07.09~07.12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서울)
 07.10~07.11 제2차 남북 겨례말 큰사전 편찬회의 회의 개최
 07.19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채택
 07.20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개최
 07.20~07.25 남북민족작가대회 개최
 07.22 8·15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07.25~07.27 제1차 남북수산업협력 실무협의회의 회의 개최
 07.26~07.28 8·15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 07.26~08.08 동아시아 축구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대전, 대구, 전주)
- 07.28~07.30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07.29 북남경제협력법 제정
- 08.05 남북 9개 경협협약서 발표
- 08.08~08.10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08.10 남북통신연락소 개설
- 08.12 남북해상당국간 유선통신망 연결
- 08.14~08.17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개최(평양)
- 08.15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개시
- 08.15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시범상봉)
- 08.18~08.20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
- 08.23~08.25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08.23 조용필 평양공연 개최
- 08.24~08.2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실무협의
- 08.31 금강산 면회소 착공식
- 09.01~09.04 제16회 아시아육상 선수권 대회, 북한선수단 참가(인전)
- 09.04~09.06 제2회 남북방송인 토론회
- 09.07 안중근 의사 유해공동발굴사업 관련 남북실무접촉 개최
- 09.13~09.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09.15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 남북공동추진 합의
- 09.28~10.01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09.29~09.30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
- 09.30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유해 인도
- 10.28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 개설
- 11.02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개성공업지구시찰
- 11.05~11.10 제12차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
- 11.10 경기도 대표단 방북
- 11.10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 서명(개성공단)
- 11.10 대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조례 통과(지자체 최초)
- 11.15 금강산 신계사, 영통사 복원사업 및 평양제일교회, 봉수교회 개관사업 추진
- 11.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1.23~11.24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
- 11.23~11.26 평양/남포간 마라톤대회 개최
- 11.24 겨례말 큰사전 편찬회의
- 11.24 한신대, 남북 학문 교류 학술대회

- 11.24~11.25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12.02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 김영남 면담
- 12.07 남북저작권 보호에 관한 협의
- 12.08~12.09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12.09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성방문
- 12.13~12.16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제주도), 공동보도문 합의
- 12.19 뉴라이트청년연합 출범
- 12.20 서울변호사협회, 남북동포 송환촉구 가두행진
- 12.20 대북지원 평가 NGO 정책토론회
- 12.21 동해 표류 하던 북한 어민 6명 동해항 도착
- 12.22 정동부, 남북 IT협력 세미나 개최
- 12.22 평양민족예술단 민족화합한마당 공연
- 12.22 교사 위주 2차 금강산 체험연수
- 12.31 남북·해외청년·금강산서 공동 해맞이

동북아정세 일지

- 01.08~01.11 미국 랜토스 의원 일행 방북, 북한 양형섭, 김계관, 백남순 면담
- 01.11~01.14 미국의회대표단(웬든의원 등) 방북, 김영남, 백남순, 리찬복 면담
- 01.18~01.19 제3차 한·미 방위비분담 관련 회담(서울)
- 01.31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주최 한·러 경제포럼 개최(모스크바)
- 02.02~02.04 동북아 전력연계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하바로프스크)
- 02.03 제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개최
- 02.10 북한, 6자회담 무기연기 및 핵무기 보유 선언
- 02.22 미·러 정상회담 개최
- 02.23~02.24 제4차 한·미 방위비분담 관련 회담(워싱턴)
- 03.14 중국 국가분열방지법 제정(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 03.17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 03.14~04.22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개최
- 03.15~03.16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 관련 회담(서울)
- 03.30~04.02 한·중 국방장관회담(베이징)
- 04.12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대북인권결의안 상정)
- 04.20 중국 지원성, 식량 등 대북지원(북한에 쌀, 옥수수 등 약 100만 위안 상당의 물자 지원)
- 04.22 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모스크바)
- 04.23~04.26 미국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방한
- 05.02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 05.07 한·중 외무장관회담 개최(교토)
- 05.11 북한 외무상 대변인,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발표
- 05.29 중·대만 정상회담 개최
- 06.03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제주도)
- 06.10 EU인도지원사무국(ECHO) 북어린이, 임산부 영양개선위한 300만 유로 지원
- 06.11 한·미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 06.20 한·일 정상회담 개최(서울)
- 06.21~06.23 한·중 총리회담 개최(베이징)
- 06.30~07.03 중·러 정상회담(모스크바)
- 07.09 북한 6자회담 복귀 선언
- 07.12~07.13 미국 라이스크무장관 방한
- 07.19 미국 프리덤하우스 주최 제1차 북한인권국제대회개최(워싱턴)
- 07.26~08.07 제4차 6자회담 개최(베이징)
- 08.18~08.25 중·러 군사합동훈련 실시
- 08.19 미국 제이레프코워츠 북한 인권대사 임명
- 08.29 제60차 유엔총회(북한인권실태보고서 제출)
- 08.31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도쿄)
- 09.13~09.19 2단계 제4차 6자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
- 09.27 한·러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KOTRA) 주관 개최(모스크바)
- 10.16 한·러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제 상호 협력협정 체결
- 10.21 제37차 한·미 인도협회의의 개최(서울)
- 10.28~10.30 북·중 정상회담 개최(평양)
- 11.03~11.04 북·일 국교정상회담 재개(베이징)
- 11.09~11.11 제5차 6자회담 개최
- 11.12~11.19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부산)
- 11.15 한·중 외무장관회담 개최(부산)
- 11.16 한·중 정상회담 개최(서안에 한국총영사관 개설 합의, 부산)
- 11.17 한·미 정상회담 개최(경주)
- 11.18 한·일 정상회담 개최(부산)
- 11.19 한·러 정상회담 개최(부산)
- 12.01 KOTRA, 노브시버르스크 무역단 공식 개설
- 12.0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베이징)
- 12.07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한범죄정권 주장
- 12.08~12.10 제2차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서울), 서울 선언 채택
- 12.12 한·중 정상회담(북핵문제 논의)
- 12.16 제60차 미국 재무부, 북한 위폐제조 의혹 브리핑
- 12.16 유엔총회,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12.16~12.17 ‘한반도 평화와 고려인’ 토론회(러시아)
 12.20 중국,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에 반대입장
 12.23 일본, 북 마약밀매 자금세탁 단속 강화
 12.24~12.25 북·일 정부간 협의 개최(베이징)

북한사건 일지

- 01.15 외무성 부상 김형준 임명
 01.27~02.08 경제대표단(단장: 이명산 무역성 부상), 북·몽골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회의위원회 회의 참석
 02.02~02.03 선군혁명총진군대회 개최
 02.06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02.09 노동상 및 조선·이란친선협회 위원장 교체(리원일→정영수)
 02.15 멕시코 주재 대사에 서재명 임명
 02.17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베로즈카 무용단 단장 미
 라콜조바 접견
 02.21 김정일 위원장,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접견(후진
 타오 주석 구두친서 전달)
 02.22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 과업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02.26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김종태임명,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 리
 동팔 임명
 03.02 외무성 6자회담 관련 비망록 발표
 03.15 북한 경제무역대표단(단장 이용남 무역성 부상)이 제1차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참석
 03.15~04.05 양형섭, 아프리카 순방(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잠비아,
 앙골라)
 03.16 김하동(세르비아 대사), 세르비아 대통령과 수상 면담
 03.21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재건, 현대화 공사진행
 03.22 북·중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03.2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개최
 03.22~03.27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 중국 공식 방문
 03.25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개최
 03.27~03.30 최태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방문
 03.28 조교불교도연맹·한일불교복지협회, 북관대첩비 반환촉구 합의
 서 채택
 03.29~04.02 중국 공산당 친선대표단(단장 마문 부서기) 방북(평양), 김영남

- 면담
- 03.31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관련 담화 발표
 - 03.31 이탈리아 주재 대사 최택산 임명
 - 04.02~04.05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중국 방문
 - 04.03~04.08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단장: 최태복), IPU총회(필리핀)연설
 - 04.06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에 김정호 선출(평양)
 - 04.06 조국조선 중앙위원회, 남한 '인민봉기'관련 반미선동 비망록 발표
 - 04.08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4.25 문화회관)
 - 04.09 북한은 체신대표단(단장: 박명철 체신성 부상)이 독일·프랑스·러시아 방문
 - 04.09 불가리아 주재 대사, 조승주로 교체
 - 04.11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3차회의 개최(만수대 의사당)
 - 04.11 북·러 2005~2006년 규격, 계량, 품질관리부분 협조계획서 체결
 - 04.12~04.12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북(김영남 면담)
 - 04.16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통보1호 발표
 - 04.19 김영남, 자카르다의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4/21: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 4/23: 후진타오주석, 네팔국왕, 웨이셀대통령, 이해찬총리면담)
 - 04.20 대동강오염방지법 채택
 - 04.20 식량증산위한 43개 식량생산지에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 파견 연구 진행
 - 04.22 북·중 2005~2006년 규격, 계량, 품질관리부분 협조계획서 체결
 - 04.23~04.26 노르웨이 외무성 대표단 방북
 - 04.26 인민군 창건 73주년 기념행사
 - 04.26 고구려 벽화고분 정리등 유물, 유적 보존사업 진행
 - 05.01 200원권 신권 발행
 - 05.03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비난
 - 05.03~05.06 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진행
 - 05.04 쿠바 군사대표단(단장: 레오나르도 안도요 발데스 부총참모장) 방북, 이명수대장(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쌍방 군사회담 개최
 - 05.04~05.05 북·UNDP 국제무역토론회 개최(평양)
 - 05.05 '조선광복회 창립 69돌' 행사 개최
 - 05.05~05.07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대표단(단장: 콘스탄틴 코사쵸프 외교위원장)방북,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단장: 홍서헌 북·러 친선의원단 위원장)과 회담
 - 05.06 각지에 '혁명사적 토지비' 건립

- 05.07 조평통 대변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비난 기자회견
- 05.10 농업성에 '과확농사확대도입 중앙지휘부' 설치
- 05.14 외무성 대변인, 라이스 美 국무장관의 '무서운 정권', '북미 기본합의문 파기자' 발언 내용 비난
- 05.16~05.19 제8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최
- 05.21~05.24 체코 국회 하원(의장: 루보미르 자오랄렉) 방북
- 05.21 기니공화국 대통령 특사(파씨네 뚜레) 일행 방북
- 05.24 '조총련 창립 50돌' 관련 행사
- 05.24 대북 투자상담회 개최(파리)
- 05.27 세네갈 주재 북한대사 김봉희 임명
- 05.28 라오스 정부 대표단(단장: 솜사왓 랑사왓 부총리) 방북(김영남, 백남순 외상 등과 면담)
- 05.29 제44차 북·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개최(평양) 및 북중 국경하천 운항에 관한 협의서 체결
- 05.31 최고인민회의, 금속기계공업성 조직개편 발표
- 05.31 북·중 자전거 합영공장 건설추진
- 06.02 외무성 대변인, 딕 체니 美 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중상모독 발언 비난
- 06.02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김운기에서 김락희(6/2보도)로,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연형묵에서 박도춘(6/6보도)으로 교체
- 06.02~06.11 중앙은행 대표단,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 참가
- 06.03 외무성 대변인, 美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미스터(Mr.)란 호칭 사용과 관련 '선생'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였다고 긍정 평가
- 06.03 북한 고려은행과 영국 글로벌그룹 합작으로 고려·글로벌 신용은행(상업은행 기능) 설립
- 06.04 인민보안성 대표단(단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러시아 방문, 러시아 내무성과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 06.05 김정숙 우상화 관련 함북 회령시 정비
- 06.11 세네갈 정부대표단(단장: 아싼 비안유 도시경영 및 국토관리상)이 방북 및 세네갈 대통령 친서 전달
- 06.14~06.17 6·15 통일대축전 개최
- 06.14 무역은행 대표단(단장: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참석(제네바)
- 06.14 인도 외무성 대표단 방북
- 06.15 조평통, 6·15남북공동선언 5돌 비망록 발표
- 06.19 '김정일 당사업 개시 4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06.19 외무성 부상, 증동순방 및 제2차 남수뇌자 회의 참석
- 06.19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표단(단장: 김진범 부위원장)이 제16차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참석(프랑스)
- 06.21 중앙은행 대표단(단장: 김완수 총재) 제75차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 참가(스위스)
- 06.22~06.24 전통의학에 관한 WHO 동남아 지역 강습회 개최
- 06.22 제31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
- 06.23 북·중 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며 도소매로 물품을 판매하는 '보통강 공동 교류시장' 개설
- 06.23 북·중 공동운영 '물자교류시장'개설
- 06.25 6·25 55주년 관련 평양시 반미 군중대회 개최
- 06.27 예멘, 우간다, 케냐와 무역경제협조 협정 등 체결
- 06.28 세계여자권투협회(WBCF) 선수권 대회 개최(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 06.28 브라질 주재 대사에 박혁 임명, 페루 주재 대사에 김선옥 임명
- 06.29 북·예멘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 및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북·우간다, 케냐 '무역 및 경제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양해문' 체결(평양)
- 07.08 김일성 사망 11주기 기념행사
- 07.09 6자회담 복귀 발표
- 07.09~07.14 미 랜트스의원 및 EU 대표단 등, 해외고위대표단 방북
- 07.1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07.24~07.25 백남순 외무상 태국 방문 및 ARF참석
- 07.30 북한 남북평등권 법령 공포 59주년 기념 대회 개최
- 08.09 당창당 및 광복 60돌 기념주화발행 정령 발표
- 08.14 '광복 6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08.14~08.18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 면담
- 08.16~10.10 '대집단체조와 아리랑 공연' 개최(평양 5·1경기장)
- 08.30~08.31 소방법 제정
- 08.31 북 무역경제대표단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참가
- 09.02~09.06 동북아시아 투자 박람회 참가(중국 길림)
- 09.06 '황남일보, 황북일보' 창간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09.07 해외동포대상 투자설명회 개최(멕시코시티)
- 09.08 '정권창당 5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09.08 미군 남한주둔 60년 즈음 미군철수 선동
- 09.11 북 역사학학회, 남한의 친일파 명단 발표 관련 담화 발표
- 09.12 조평통 대변인, 자이툰 부대 관련 비난 기자회견
- 09.13 북·쿠바 수교 45주년 기념집회 등 개최
- 09.20 몽골 경제대표단 방북
- 09.22 일본의 과거청산요구 '국제연대협의회'개막
- 09.22 외무상 최수현 부상, 제 60차유엔총회 연설

- 09.22~09.27 양형섭, 쿠바·베네수엘라 순방
- 09.24~10.04 북한정부친선대표단 몽골 방문
- 10.01 식량배급제 정상화 조치
- 10.04 당창건 60돌 기념 '전국연구토론회' 개최
- 10.08~10.11 중·러 대표단, 당창당 60돌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 10.10 '당창당 60돌' 기념행사
- 10.11~10.14 북한·EU 경제개혁워크숍 개최(북외무성, EU, 나우만재단 공동)
- 10.12 북한대표, 유엔총회 제60차회의 제3위원회에서 연설
- 10.18~10.22 나이지리아 정부대표단 방북
- 10.22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연혁묵 사망
- 10.24~10.27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평양)
- 10.26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 개최
- 10.28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 10.31 '노동신문 창간 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10.31 경제대표단, 쿠바·브라질 베네수엘라 방문
- 11.04 북·쿠바 '제24차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의정서 체결
- 11.05 북 대표, UN총회 인권 관련 보도
- 11.05~11.08 러시아외무성 대표단 방북
- 11.07 북·중 수력발전회사 제57차 이사회 개최
- 11.09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미군측에 전통문 발송
- 11.23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방북
- 12.0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 일행 방북
- 12.06 스웨덴 총리 정치특보 방북
- 12.08 북한, 문화상에 김진성 임명
- 12.10 스웨덴 외교부 대표단 방북
- 12.13 WEP 모리스 사무총장 방북
- 12.15 세계적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북 교사·학생과 간담회
- 12.15 북한, 금강산 수금계좌 오스트리아로 전환
- 12.19 북한, 중국 후진타오 주석 방북 기념 우표발행
- 12.19 백남순 외무상 팔레스타인 대사 면담
- 12.21 북한, 역류 러시아 화물선 블라디보스토크 귀환
- 12.21 중·북 직지심체요절 공동 발굴 합의
- 12.22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 멕시코 노동당 관계들과 친선모임
- 12.24~12.27 북한정부대표단 중국 방문
- 12.24~12.27 북한 부총리 로두철 중국 방문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근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종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종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근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근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근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년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근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근,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